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nara.kdi.re.kr

2016 12



OECD 20년 한국경제 20년

송년호 특별 INTERVIEW 윤종원 주OECD대표부 대사
ISSUE 나도 혼자 산다!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NOW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 블록체인

집중토론 美 트럼프 시대, 2017년 세계경제는 어디로 **경제정책해설** 4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 조성 / 장년,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는다 / 서울, 경기 · 부산 일부, 세종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4차 산업혁명 대비해 中企인재 10만 키운다 **그들은 바쁘다 시즌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경제학 소믈리에** 우리가 모르는 미국, 우리가 몰랐던 트럼프 **인사이트** 동태경제학으로 본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는 지금** 가계부채비율 높으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까?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드러그스토어, 전자상거래, 편의점…日 유통망 시장 선도 **시평** 예산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다!

ISSN 1227-8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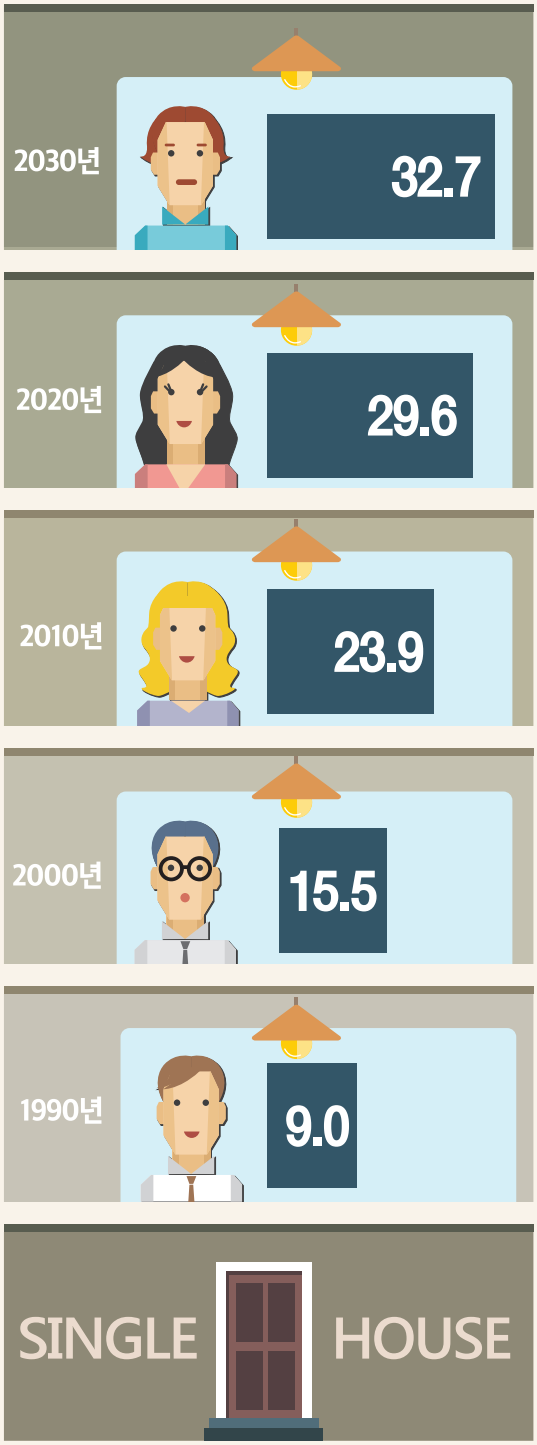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1. 1인 가구 비중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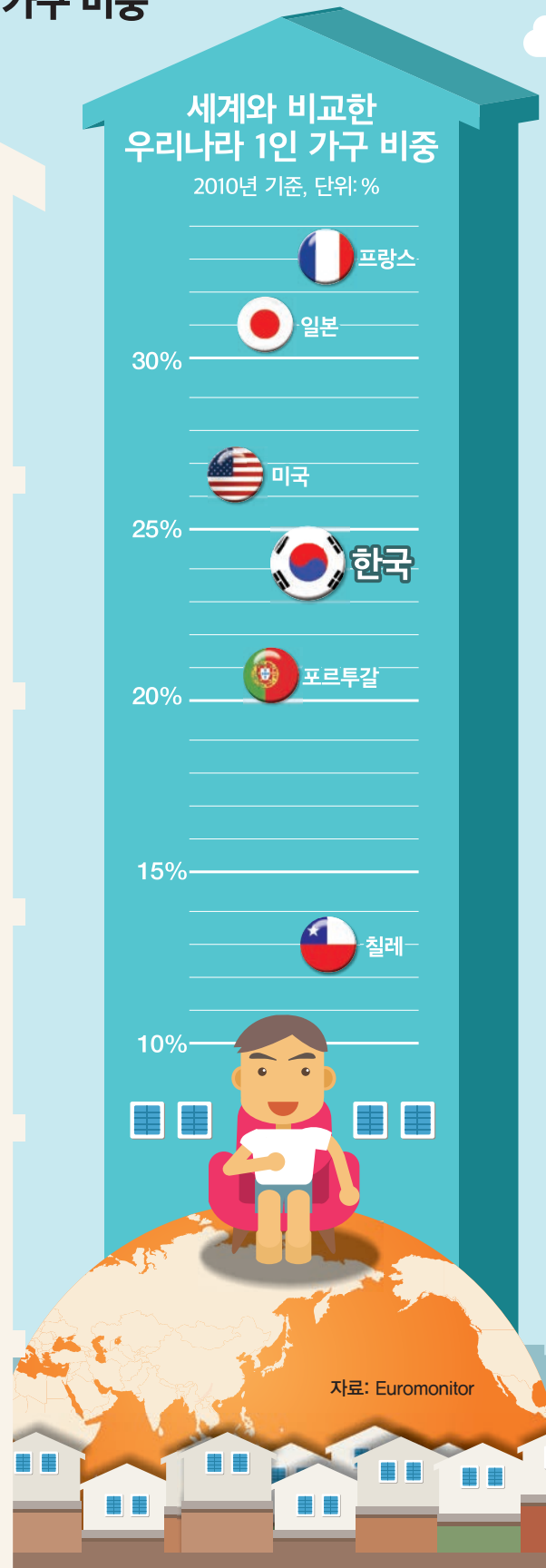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0년까지는 실제수치, 이후부터는 추계치



자료: 통계청

세계와 비교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

2010년 기준, 단위: %



자료: Euromonitor

2. 새로운 소비주체, 1인 가구



3. 1인 가구 vs 2인 가구

식료품 비용 및 외식비 월평균 소비지출액



운동·문화비 월평균 소비지출액





나라경제

2016. 12 [제27권 12호 통권 313호]

나라경제는 **KDI**와 **15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준경 KDI 원장
편집인	고형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재열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준호 창조정책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 박윤규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김윤정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자치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창조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정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배금주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장이재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강주엽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창조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남동우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전해룡 기획재정부 창조정책담당관실
편집장	유성임
취재·편집기자	권기대, 홍성아, 허지혜
배포	고광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12
구독문의	044-550-4656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27권 12호(통권 313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42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 12 CONTENTS



12

07

Special Theme

OECD 20년, 한국경제 20년

08 **지난 20년간 연평균 4.2% 성장…**
OECD 평균치의 2배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10 **OECD 3대 가치 개선 지속해와…**
균형 잡힌 발전은 아직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2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비교우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4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새로운 모멘텀 절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목말사회' 코앞으로…**
연공급 거품 제거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18 **디지털 지능정보사회 선도할**
교육체제 구축 시급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20 **사회적 자본 확충하고**
경제 · 사회 운용의 투명성 높여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2

INTERVIEW

윤종원 주OECD대표부 대사

22 "대내외 여건 불확실할수록 건전한 거시정책 운영 중요해… 개혁 모멘텀 유지돼야"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주간

38

집중토론

美 트럼프 시대, 2017년 세계경제는 어디로

38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발등의 불,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8

ISSUE

나도 혼자 산다!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29 2017년 키워드는 '1인 사회'…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 추구에 집중
김인구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30 1인 가구 증가는 고등교육과 취업, 고령화가 불러온 세계적 흐름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31 바야흐로 대'혼'민국… 혼자, 작게, 빌려서, 간편하게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32 청년층 1인 가구, 문화·여가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33 국민행복주택, 최대 6년까지… 사회초년생·대학생 대상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34 "나만의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즐길 수 있어… 주거·안전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김주현(직장인)·유정우(개인사업)

36 4종 4색 1인 가구, 다양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44

특별기고

4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국민신뢰 회복
윤병태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53

NOW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 블록체인

54 다양한 직거래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IoT환경에 적합한 도구이자 기회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56 제4차 산업혁명 실현할 블록체인, 금융권 도입은 더욱 가속화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진흥팀장

58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준비하라!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42


48


78

60

경제정책해설

60 4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 조성
김영문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장

62 장년,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는다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64 서울, 경기 · 부산 일부, 세종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66 4차 산업혁명 대비해 中企인재 10만 키운다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

68

세계는 지금

68 가계부채비율 높으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까?
김제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주재관

Column

02 INFOGRAPHIC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37 꽃보다 아빠
내년엔
정민승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42 경제학 소믈리에
우리가 모르는 미국, 우리가 몰랐던 트럼프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46 소비자 정보_LED 스탠드 가격 · 품질 비교 정보
광 성능 · 수명 등 품질 차이 있어
민태홍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 주임연구원

48 그들은 바쁘다_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푸른 지구와의 약속, '기후변화'에 맞서다
권춘경 기후변화협력과 사무관

51 혁신 스타트업!
좌초 위기를 맞은 '창조경제'에 바란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71 스마트 세상
현실로 다가온 가상의 세계를 만나다
이우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72 통계 바로 보기
마이크로데이터 120% 활용하기
김문숙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서기관

74 우리말 바로 쓰기
새옹밥, 감투밥, 소밥…
'밥'을 가리키는 말들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75 정남구 기자의 도시농부
가장 큰 수확물은 '힐링'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76 경제뉴스 행간 읽기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중진국 함정 탈출할 수 있어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78 일상의 발견
글로벌화와 박물관 예찬
이인옥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80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_일본
드러그스토어, 전자상거래, 편의점…
日 유통망 시장 선도
유예진 KOTRA 나고야무역관 과장

82 인사이트
동태경제학으로 본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84 일본 건축기행
영광과 굴종의 흔적,
오키나와 슈리성
최우용 건축가

86 시평
예산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KDI 나라경제**를 입력한 뒤
〈KDI 나라경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최신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등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OECD

OECD 20년 한국경제 20년

20년을 쉼 없이 달려온 한국경제가 대견하다. 잠시 뒤돌아 지나온 행적을 살펴봤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는 OECD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연평균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출은 2004년 2천억달러를 뛰어넘으며 본격적인 수출강국 대한민국 시대를 열었다. 1996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커진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중간 중간 오버페이스의 흔적도 엿보인다.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OECD 2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나라경제』가 만나봤다.

economic

KOREA

지난 20년간 연평균 4.2% 성장… OECD 평균치의 2배

GDP 1조7,487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7,340달러로
증가 →지난 20년간
경제규모 약 3배,
1인당 국민소득 2배 이상 확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로 분류
65세 이상 인구 비중 계속 증가해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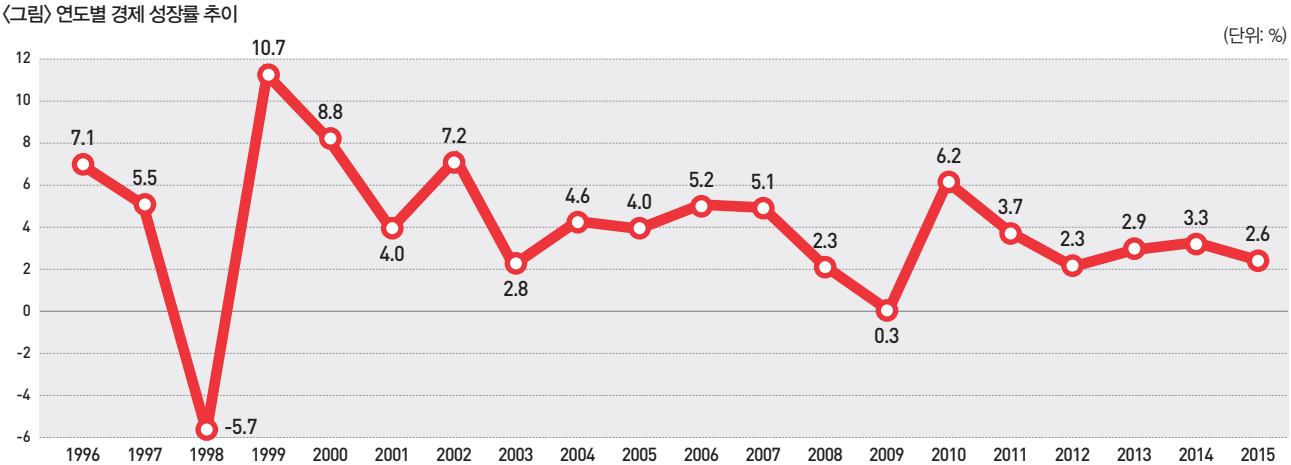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세계경제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 협력기구로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더 잘 알려진 OECD는 2016년 현재까지 35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2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1996년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은 6,585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282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996년 2,800억달러(수출 1,297억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당시 우리나라의 살림 예산은 63조원이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2번의 강산이 변하고 청년이 중년의 아재로 바뀔 만큼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경제정책을 비롯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OECD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립돼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꼬리표를 떼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출발은 신통치 않았다. 공교롭게도 가입 이듬해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그림〉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겪었다. OECD 가입조건에 맞추기 위해 각종 제도 등의 개방화가 앞당겨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다행히 금 모으기 운동으로 표출된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통해 위기를 넘기며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했다.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신화라는 역사를 이뤘고 2004년 수출 2천억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해 칠레를 시작으로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7년 미국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박차를 가했다.

순항을 거듭하던 한국경제는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가장 먼저 경기회복을 하게 된다. 특히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고 G20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1년에는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또 다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조 7,487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7,340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20년간 경제규모는 거의 3배,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배 이상 커졌다.

수출은 2004년 처음으로 2천억달러를 돌파(2,538억달러)한 후 불과 2년 만인 2006년 3,255억달러로 3천억달러도 넘어섰다. 2010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5,267억달러를 기록해 1996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나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됐다. 나라살림의 규모도 커져 올해 387조원의 예산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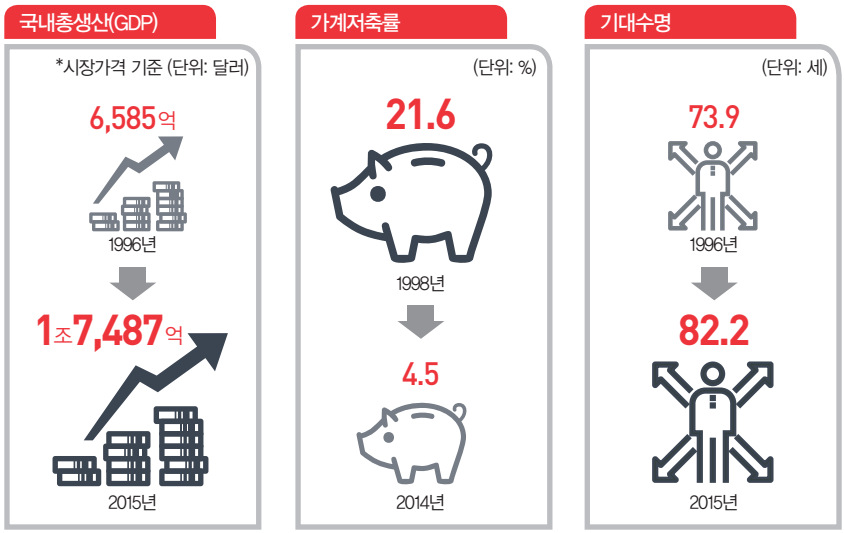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2016년 현재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한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한-중미 FTA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은 OECD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연평균 4.2%의 GDP 성장률을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ODA(공적개발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된 사례로도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올해 약 2조4,390억원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8개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기대수명도 꾸준히 증가해 1996년 73.9세에서 지난해 82.2세로 늘어나 이제는 노인인구 급증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로 분류된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00년 7.2%, 2010년 11%로 높아졌으며 2018년에는 14.3%까지 늘어나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050년이 되면 일본, 스페인과 함께 고령인구가 70%를 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다. 이 밖에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1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며, 자살률은 1996년 10만명당 12.9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2배 증가하는 등 OECD 내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은 뒤 아직도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시점에서 맞이한 OECD 가입 20주년은 한국경제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필요해졌음을 알려준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자료: 통계청, 금융연구원

〈표〉 OECD 20년 한국의 경제사회 지표 변화

	1996년	2015년
1인당 국민소득(달러)	1만2,282	2만7,340
수출(달러)	1,297억	5,267억
수입(달러)	1,503억	4,364억
국가예산(조원)	63	387 (2016년)
출산율(명)	1.57	1.21
10만명당 자살률(명)	12.9	26.5
연간 노동시간(시간)	2,637	2,124

자료: OECD,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OECD 20년, 한국경제 20년
핵심가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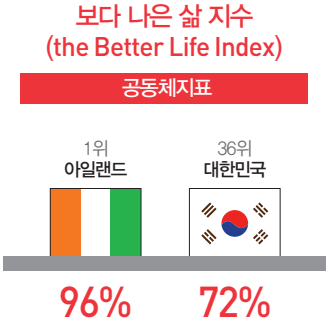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stkim@kli.re.kr

OECD 3대 가치 개선 지속해와… 균형 잡힌 발전은 아직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만 회원국으로 가입을 허가하는 가치관의 동질성 강조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가치로서 보편화될 수 있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노력 필요



일정한 경제수준에 도달한 국가가 가입할 자격을 가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협약 제1조에 국제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둘째,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 셋째,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지상과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립 목적과 잘 부합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만 회원국으로 가입을 허가하는 가치관의 동질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 당시 개방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국내 일부 부문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인권존중은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016년 21번째로 파리클럽 가입… 개방된 시장경제 가치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

동질성을 가진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정기적·비정기적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가지면서 모범적 관행(best practice)의 이해와 해당 정책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원국의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축적된 지식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20년이 된 회원국으로 개도국에 이러한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으나 여전히 선진국의 정책사례, 법제도의 변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나라에 반영하는 노력과 집단압력(peer pressure)의 형식으로 3대 가치에 대한 계속적인 개선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대 가치 모두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균형 잡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다.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가입 후 20년 동안 GDP는 3배, 수출규모는 4배가 증가하는 쾌

거를 이루면서 2016년에는 21번째로 파리클럽에 가입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지위가 이동하는 등 개방된 시장경제의 지표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공동가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업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교육수준의 발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향상된 시민의식을 동반했고 자연스럽게 보다 개선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시의 사회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요구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수준을 우리 사회는 아직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사정권시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CD 가입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현황이 우리나라에 많은 경험을 전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과연 우리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적 리더들에게 수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진 못한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은 5년 임기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변혁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다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이 5년마다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일까?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안정된 사회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소수의견 수용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모습으로 실현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 문화적 변화 추진해야

인권존중 또한 지난 20년간 제도적 보완과 문화의 변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최근 정체 상태, 장시간 근로, 일-여가의 불균형, 여성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 사회참여를 할 여유 없음, 삶에 대한 만족도 낮음 등의 지표는 인권존중을 위한 풍토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시장 측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확대와 가구별 소득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인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나뉘어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승진, 임금 성장률 등 여러 조건에서 우대를 받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다면 인권존중의 가치관이 보편적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까?

신문지상에서 자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자살한 사건 등 사회적 배려가 모자란 점은 OECD가 발표한 '보다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 중 공동체지표(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압도적인 최하위(1위 아일랜드가 96%인 한편 우리나라는 36위로 72%를 기록)를 차지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고, 삶의 질 측면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정보교환과 연구를 통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 새로운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가치로서 보편화될 수 있기 위해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에 OECD 회원국과의 정보공유와 정책교환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확대와 가구별 소득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인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사진) 지난 6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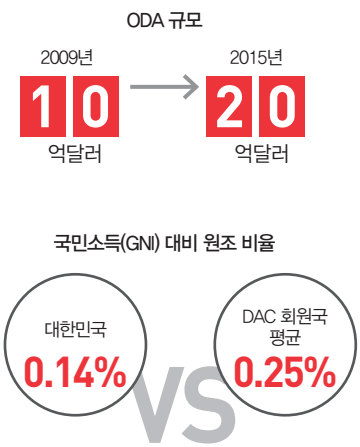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bokyeong0623@gmail.com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비교우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2009년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여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아

정부의 선도적 역할,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 행정시스템의 민주적 전환 등의 경험은 지금의 개도국에 풍부한 시사점 줄 수 있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받는 원조 자금이 전체 재정수입의 70%에 이르던 때도 있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엔 구호물자 같은 무상원조 대신 국제기구나 미국에서 받은 양허성 차관(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이 원조의 주된 형태가 됐다. 국제민간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최빈국 한국에 이런 양허성 차관은 자본도입의 주된 원천이 됐다.

1995년 국제협력단 설립해 무상원조 본격 제공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받는 원조의 규모도 1970년대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가 이런 자금을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의 지원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하지만 석유파동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며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 제공이 실현된 것은 소위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87년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시발점이 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이 선진국 그룹에 접근하면서 개도국 개발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반영해 1995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해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한 원조 공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외원조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시기는 2009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우리나라는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정식 가입했다. 이것은 공여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음과 동시에 원조 제공에서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정책과 요구를 존중하고 지원사업을 할 때도 수원국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원조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인적자본 축적 지원에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지난 5월 12일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직업연수센터에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이 자동차 교육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낮추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원조를 통해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개도국 발전 · 성장에 필요한 법적 · 행정적 제도 마련에 집중을

원조 공여의 후발자인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도록 우선 원조 규모를 확대했다. 2009년 10억달러 남짓했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2015년에는 20억달러 이상으로 증액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줄이거나 거의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조의 대폭적인 증액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증대는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의 첫걸음일 뿐이다. 최근 몇 년간 원조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국민소득(GNI) 대비 원조 비율은 아직도 0.14%로 DAC 회원국 평균인 0.25%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도 원조규모를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그리고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여하는 것이다. SDG는 MDG와 달리 목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MDG가 절대빈곤 축소, 교육이나 보건 분야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SDG의 범위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 대응, 안전강화 등으로 넓어졌다. 우리의 적은 원조재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어려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느 목표에 집중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비교적 최근의 산업화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도국이 처한 환경과 그나마 유사한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었으며,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유능한 인력과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개도국의 인적자본 축적 지원에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나 성장에 필요한 제도의 구축과 개선의 경험 역시 우리가 가진 자산이다. 정부의 선도적 역할,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구축, 행정시스템의 민주적 전환 등의 경험은 지금의 개도국에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짧은 산업화 과정 동안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여러 정치 ·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회복할 수 있었던 동력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구축의 역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이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우리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상원조 혹은 양허성 차관이라는 수단을 가진 소수의 공여국 중 하나다. 이 수단은 비교적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의 지원에 유용하므로 SDG 분야 역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DG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우리가 꾸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오히려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제개발에 거의 관심이 없거나 우리 기업의 협소한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유럽 선진국과 일본이 국제개발에 앞장서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으로 그것이 자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권도 좀 더 넓고 긴 시야에서 국제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ichang@kiet.re.kr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새로운 모멘텀 절실

투자효율성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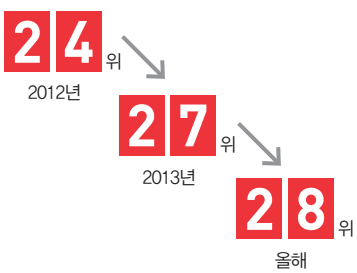
더욱더 엄격한 우리 경제의 자체 진단에 기초한 구조개혁 마련해 추진해야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외형은 그럴 듯해졌지만 내실과 실속을 다지지 못한,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가계부채, 소득의 양극화 같은 구조적 역풍에 직면

우선 OECD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국내총생산(GDP)은 명목기준 481조원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GDP 규모는 1,559조원을 기록, 지난 20년간 3.2배가 됐고, 수출은 1996년 1,297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5,267억달러로 20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는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올해는 28위로 하락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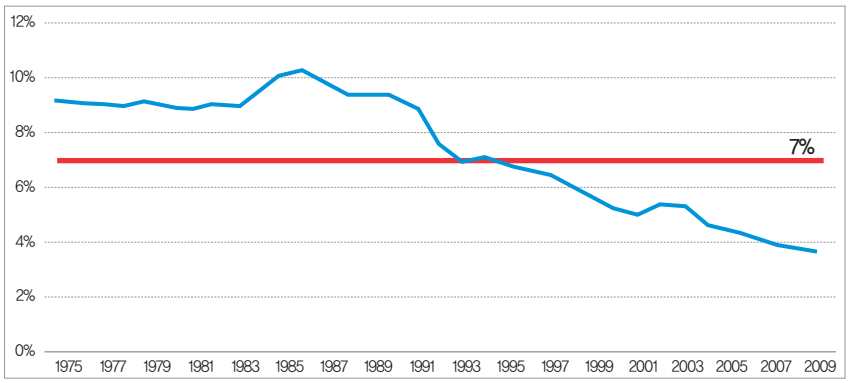
'삶의 질' 지수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에서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관이 발제하고 있다.

〈그림〉 10년 이동평균 성장률 추이(1975~2009년)



자료: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개혁」, 『서울대 경제논집』 제55권 제1호, 1996, p.8.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정책권고를 제시하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IMF는 한국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에서 "현재 소득 수준이 아직 OECD 선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세계무역이 둔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출 의존도, 기업 부문의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소득의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20년 전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가입을 통해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에게는 무척 실망스러운 평가이자 다소 당혹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OECD 가입 20년이 된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도 우울하지만 최근 국내 한 학자의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OECD 가입 이후 2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외형을 키우는 것 외에 내실을 다지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게 한다.

지난 6월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통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뚜렷한 하강추세 없이 30년 이상 7~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경제가 지난 20년간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p씩 하락하면서 현재 2%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 장기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진단을 내렸다(〈그림〉 참조).

OECD의 다양한 구조개혁 권고와 총수요부양정책,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 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성장 추락의 일차적 원인으로 GDP의 40%에 달하는 투자효율성 하락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효율성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체제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가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이 성장동력화되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의 핵심인 경쟁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함에 따라 경쟁기업의 숫자 자체가 제한돼 창업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OECD 가입 20주년을 맞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구태여 국내 학자의 지난 20년간의 한국경제 성장경로와 문제점 진단과 해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 이후 선진화 및 글로벌화 과정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추진해온 OECD나 IMF의 다양한 구조개혁(structure reform) 권고와 통화재정정책을 동원한 일반적 총수요부양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세직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처럼 생산 측면의 제약 요인으로 인한 장기성장 추락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장기성장률이 100년 이상 2%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는 경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총수요부양정책은 오히려 과잉투자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금융위기의 가능성만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발전경로와 특유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OECD나 IMF의 한국경제 진단 후 정책권고와 제시하는 구조개혁이 때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당위론적으로 시장경쟁 도입을 위한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교수의 "지난 20년간 진정한 구조개혁이 이뤄진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2년 정도에 불과했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지엽말단적이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구조개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더욱더 엄격한 우리 경제의 자체 진단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kwontaeshin@keri.org

'목말사회' 코앞으로… 연공급 거품 제거해야

양극화로 인해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통합은 더 어려워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 지친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

임금체계의 강한 연공성은 사내하도급이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의 외부화 현상 및 양극화 심화시켜

초고령사회 진입시점
2026년

266개 시군구 중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곳
100곳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 이후 8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도 36년이 걸린 과정을 우리는 26년 만에 겪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마저 겹치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2015년 전국 시군구 266개 중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곳이 무려 100곳이나 된다. 또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노년층 1인을 봉양해야 하는 '목말사회',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목말 태우는 것처럼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는 사회가 곧 도래할 전망이다. 게다가 고령화로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까지 추락한 일본처럼 우리도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심화되는 양극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가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10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20년 후에는 350만명에 가까워질 전망이고 독거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의 양극화다. 대기업 · 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것이다. 게다가 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시간당 임금 차이는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월수입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 곳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양극화로 인해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 지친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 이후 8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사진)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신중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민하고 있는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일할 기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만 제대로 생긴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문제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보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하거나 한번 고용한 사람은 절대 해고하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만들 때 주저할 수밖에 없다.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에 역동성 불어넣어야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 부족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대기업 · 공공 부문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다. 이들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고 있다. 파업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과도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매월 받는 임금은 그대로 받아야겠다는 논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들도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양보의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한편 일자리 부족의 또 다른 이유는 생산성과 괴리가 큰 임금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상당히 강하다. 누구나 한 자리에 오래 버티면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급여가 상승한다. 이런 체계 아래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임금은 계속 오르니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에 비해 30년 근무한 사람의 임금이 3.3배나 되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강한 연공성 때문에 고령층은 현재 일자리를 더욱더 지키려 하고, 역설적으로 고령층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 불안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사내하도급이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의 외부화 현상 및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13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중 생산성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상여는 5.8%에 불과하다. 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임금이 95%에 가깝다는 얘기다.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하고 기본급에서는 연공성이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여금은 성과와 연동시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임금을 더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피해 갈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 고령화와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바로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바로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의 해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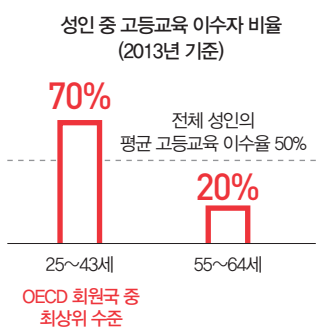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디지털 지능정보사회 선도할 교육체제 구축 시급

ICT, 문제해결능력, 사회정서기능, 의사결정능력, 평생학습, 인지역량, 직무중심 학습, 적응역량 등이 중요한 교육과제로 부각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일-학습 병행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OECD 가입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육은 상당히 많은 교육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특히 학생의 학업수행 역량이 세계 톱 수준을 달성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한국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능,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지난 15년 동안 OECD에서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과학, 수학, 읽기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의 세부 영역에서 최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더구나 한국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을 통해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기초교육은 안정적, 청년실업 · 성인 재교육 등은 혁신 필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포함한 공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흥미가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기존 학교교육이 실천한 성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교육혁신을 모색하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지도를 추진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실천했다. 교육혁신을 통해 기존의 인지역량만큼 중요한 역량으로서 감성,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신체역량 등을 포함한 비인지역량이 중요한 교육요소로 강조됐다. 이에 따라 OECD가 제안해 2030년을 목표로 실천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비율이 OECD 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기준 55~64세 성인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20%인 데 비해 25~43세 성인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전체 성인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도 50% 수준으로 최고)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평가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고등교육의 역량과 직업 현장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과 동일하지만 수리이해력과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능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표준개발이 부족한 평생학습체제로 인해 일과 학습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창의성 중심 교육활동이 대표적인 혁신사례가 될 것이다. (사진) 지난 10월 2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 마련된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관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계하는 고용 창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는 현재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적정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과 지능정보사회를 위해 학생이 준비해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즉 ICT, 문제해결능력, 사회정서기능, 의사결정능력, 평생학습, 인지역량, 직무중심 학습, 적응역량 등이 중요한 교육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한국의 기초교육이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성인 재교육, 학교와 가정 연계전략 등에서 적극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를

OECD가 한국 교육에 대해 진단 · 평가한 권고안에 비춰볼 때, 미래 디지털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교육혁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이 조화롭게 결합된 교육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창의성 중심 교육활동이 대표적인 혁신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통합적 역량이 미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entrepreneurship)의 원천으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성인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학습 연계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학습을 개발하고, 학습콘텐츠와 학습과정을 공유하며, 학습성과가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교육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의 개방된 선발체제를 통해 고등교육 입학자원을 수용하고, 학사 연구과정과 경력 중심 교육과정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인지 · 비인지역량이 통합된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융합교육과정을 실천하고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일-학습 병행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 · 활용해 역량에 기반을 둔 현장 중심 교육체제로 발전시킨다. 또한 지역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도전적인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창업교육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한국교육은 세계시민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다문화 · 통일미래 사회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고등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복한 교육, 창의인재를 만드는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jthyun@kiep.go.kr

사회적 자본 확충하고 경제 · 사회 운용의 투명성 높여야

GDP, 무역 성장과 같은 하드웨어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민주사회의 시민의식, 정부의 투명성, 사회의 신뢰, 공동체적 규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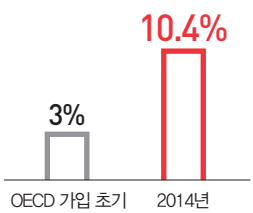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 참고해 타깃화된 복지정책 등 복지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 가능한 정부재정 관리 위한 대책 마련해야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가 한국의 OECD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그해 12월 12일 최종 기탁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이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다. 협상 당시 필자는 OECD 가입 협상팀의 일원으로 선진국 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1997년에는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로 발령을 받아 한국 대표로 OECD의 다양한 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이슈와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13차례의 경제검토를 받고 OECD의 지속적인 권고를 수용하며 경제운용과 구조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투명 ·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 자본자유화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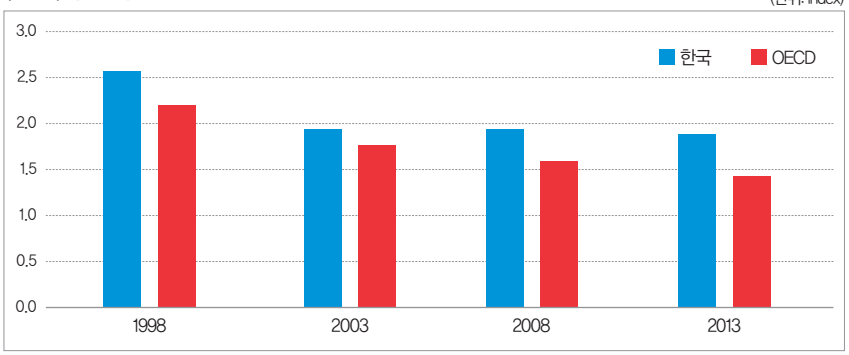
기존의 경직적이고 불투명한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지속적인 무역 확대와 기술개발 혁신을 이뤘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GDP와 무역규모는 2~3배 이상 증가했고, ICT 부가가치 창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또한 금융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가입 당시 OECD 자본자유화 규약 91개 중 유보 항목이 41개였으나 현재는 7개로 축소됐다. 이는 한국이 자본자유화에 큰 진전을 이뤘음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상품시장 규제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

공공복지 지출 수준



〈그림 1〉 상품시장 규제지수

(단위: Index)



주: 지수는 0~6 사이이며,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
자료: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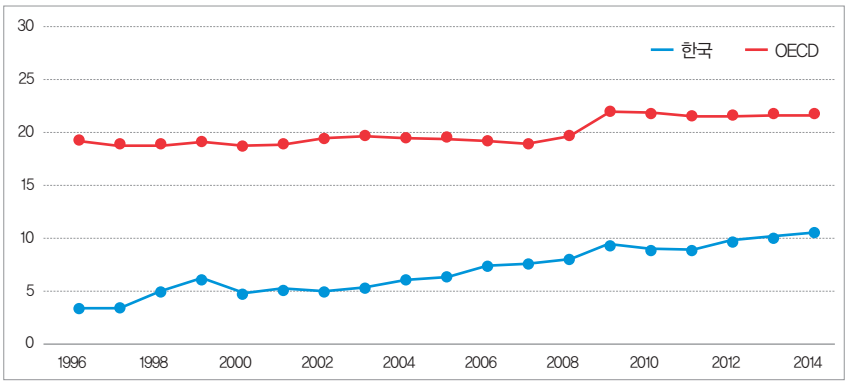
선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 등 노동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OECD는 다원적 민주주의(Pluralistic Democracy), 시장경제(Market Economy), 인권존중(Respect for Human Rights)의 3대 가치를 OECD의 모든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의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GDP, 무역 성장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민주사회의 시민의식, 정부의 투명성, 사회의 신뢰, 공동체적 규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라 전체 시스템 개선과 교육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사회 부문의 신뢰 약화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 저하, 불평등 및 빈곤 심화,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 저해로까지 이어져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공공 부문을 비롯한 전체 경제 및 사회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핵심이다. 또한 결과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정은 토론과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며,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소통, 신뢰 기반의 자율적인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림 2〉 공공사회 지출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OECD Statistics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증가속도 조절 반드시 필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복지지출 증가 등을 통해 복지제도 선진화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증가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복지 지출은 가입 초기 GDP의 3% 수준이었지만 2014년 기준 10.4%까지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12%로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증가율인 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사회복지 지출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도 "정부의 이전지출은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참고해 타깃화된(targeted) 복지정책 등 복지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 가능한 정부재정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ECD는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교육, 공공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도하고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도 다원적 민주주의, 효율적 시장경제, 그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OECD 회원국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OECD 안에서 성년이 됐으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슈를 세계 속에서 주도하고 선도하는 어젠다 세터(agenda setter)의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대내외 여건 불확실할수록 건전한 거시정책 운영 중요해… 개혁 모멘텀 유지돼야”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책의 눈높이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춰 보다 구체화할 필요 있어”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선 일자리, 소득, 사회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면밀히 대응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 이뤄져야”

“OECD 가입 20년, 앞으로도 OECD 논의를 국내 공유하고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 다져나갈 것”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해 10월 OECD 대사로 부임한 이후 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우선, OECD의 경험과 논의를 국내로 전달해 우리의 경제 ·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매주 정책브리핑을 제작해 최근 OECD의 논의동향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OECD의 권고사항 · 모범사례 등을 수집 · 분석하는 한편,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OECD에서의 국제규범 형성에 우리 국익이 반영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는 ‘OECD에서 한국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라 할 수 있습니다. OECD의 경제, 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소개하는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OECD와 함께 새마을운동 공동연구를 추진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나 환경 관련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인력의 OECD 진출인데, 현재 우리 정부인사나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거나 사무국 진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OECD 주요 위원회 및 작업반에 의장 4명, 부의장 21명이 활동 중이며, OECD 사무국 내 한국인이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OECD사무국에서는 인력을 선발할 때 지역적 다양성(geographical diversity)보다는 자질(merit)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게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 가입(1996년 12월 12일)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성년이 됐습니다. 가입 직후 경제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2009년에는 각료이사회 의장국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때 _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3시
장소 _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주간

했으며, 2010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행사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주년을 맞아 OECD대표부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 의미를 돌아보고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영화 〈국제시장〉을 OECD 사무국에서 상영해 관람자들에게 우리나라 발전과정의 애환을 알리고 깊은 공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 OECD측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가입 의미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벌였고, 10월 12일에는 매경 세계지식포럼에서 OECD 20주년 기념세션을 마련해 성장을 넘어선(GDP and Beyond)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장관, OECD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또 한차례 가입 20주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 후에 '전임 OECD 대사 좌담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연말에 가입 20주년 기념책자 발간, 가입 20주년 기념 리셉션, 문화공연 등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OECD가 그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44.6%), 2015년에는 약 2/3 수준(66.9%)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은 양적인 성장에 기여했지만,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 노동,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개혁과 무역자유화, 그리고 기술개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시스템 개선에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OECD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졌습니다. 가입 초기 OECD 선진국의 규범이나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 전파하는 등 상호협력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원조 분야에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이후 개발 클러스터에서 역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 조언을 내놓고 있는지요?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나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OECD는 추가적인 구조개혁, 특히 서비스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 육아 휴직 사용 촉진,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일학습 병행제 확대 등을 통한 여성 ·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OECD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NAEC;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이라는 새로운 정책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경제정책의 목표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와 국민 삶의 질을 중시하자는 것인데요. 즉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향유하고, 고용 · 건강 · 환경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OECD의 인식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정책의 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서민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이런 노력들이 국민의 삶에 와 닿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책의 눈높이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춰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대기오염,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경제지표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국민 행복도 등 각종 사회지표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OECD에서는 삶의 질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라는 지표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소득, 교육 등의 지표는 양호하지만 환경,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적 지표의 경우는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선 보다 다양한 차원

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적 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 즉 웰빙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설문조사에 기초한 일부 OECD 지표들이 방법론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성장 전략의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삶의 다원적 가치를 정책목표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 분배 악화가 지속되자 사회적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사께서는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기득권 부문 · 계층의 반대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가 경직적으로 강화돼 있는 데 따른 것이죠.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 문제도 진입규제 등으로 기득권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데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개혁의 성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피해는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성과가 분산되다 보니 개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수요자 중심 개혁이 가져다주는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혁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개혁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논의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한 노조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장래 노동시장 참여자인 청년, 실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논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간 『나라경제』 송년호(12월호) 특별인터뷰입니다. OECD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OECD는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국 경제가 기존 전망에 비해 부진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중간 경제전망, 9월 21일 발표). 내년에 미국(2016년 1.4%→2017년 2.1%)과 일본(0.6→0.7%)의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높아지겠으나, 유로지역(1.5→1.4%), 독일(1.8→1.5%), 영국(1.8→1.0%), 중국(6.5→6.2%) 등은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및 기업투자 증가,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올해에 비해 확대(2016년 2.7%→2017년 3.0%)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경제전망, 6월 1일 발표).

이럴 때 우리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 ·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선거결과에 따른

윤종원
주OECD대표부 대사

서울대 경제학과, 미 UCLA대 경제학 박사

1983	제27회 행정고시
1994	재무부 재무정책국 사무관
1996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
1997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2001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
2003	대통령비서실 파견
2005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2006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2009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1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12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2015. 10~현재	주OECD대표부 대사



정책기조 변화, 유럽의 난민 문제, 국제 원자재 가격,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성장속도 등 대외여건이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시정책은 향후 경기 대응여력을 확보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측면의 대응은 산출갭(GDP갭)의 정확한 추산과 기대 인플레, 금융시장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간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즉 자산가격 상승, 금융 부문 수익성 저하, 민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재정의 추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기축통화국과 다른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거시정책의 건전한 운영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및 서비스 부문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사회적 자본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문제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는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은 수요 감소 또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구조적 · 추세적 변화가 일자리, 소득, 사회계약 등 우리 경제 ·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둔화 소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확산 등 고용기회가 계속 창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제고 노력도 절실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인재 교육과 함께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노령층,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와의 협력방안은?

OECD에서는 이미 분야별 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회원국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는 ICT기술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고용불안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일자리 질 개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소득분배 개선 등을 담은 새로운 고용전략(Job strategy)도 마련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Education 2030' 등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탐색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OECD와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몇 안 되는 거시경제 부문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계시는데요. 경제관료로서 원칙이나 정책철학은?

제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규율 잡힌 시장경제' 또는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사실 현실세계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비대칭성 등 실패요소가 많거든요.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 정부의 실패를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만, 시장을 방치하게 될 경우 건전한 경제시스템이 되기 어렵습니다. '규율 잡힌 시장경제'가 갖춰져야 자본주의 경제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합의 아래 법과 원칙, 즉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룰이 엄정하게 준수 · 집행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듬어 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 요즘 포용적 경제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이거든요. 아울러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건설적 토론, 개방적이고 포용적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책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을 맞은 OECD대표부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지요?

지금껏 OECD대표부는 우리나라 경제 · 사회의 선진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OECD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보물창고로서,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대표부 모든 직원들은 OECD 논의를 국내에 공유하고 OECD 내에서의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한층 더 다져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생활속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1 세금고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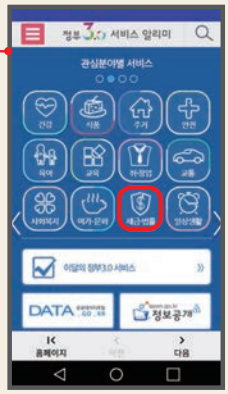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2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검색



〈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 〉

- 인터넷 검색창에 "마을세무사" 검색
  ➡ 행자부 마을세무사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자치단체 전화 문의 등을 통한 확인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세금 · 법률 분야)



3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도 가능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상담도 가능

4 세금고민 해결



-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 · 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나도 혼자 산다!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혼밥', '혼술'을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형태가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솔로 이코노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싱글족들은 유통업계의 큰손으로 더 작고, 더 간편한 상품 · 서비스를 속속 등장시키며 우리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때론 유쾌하고, 때론 씁쓸하기도 한 '솔로 이코노미' 시대가 불러온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나라경제』가 들여다봤습니다.

ISSUE

김인구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clark@munhwa.com



2017년 키워드는 '1인 사회'…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 추구에 집중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분석서가 쏟아지며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변화를 다룬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 예측이 어렵다. 국내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은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 등으로 전 세계가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법. 수많은 분석서가 주목한 내년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1인 사회'로 요약된다.

2007년부터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펴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내년 키워드로 '1코노미'를 꼽는다.

1코노미는 '1인'과 '이코노미(economy)'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인정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혼자 하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최소화하고 대신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일본식 '혼밥(혼자 밥을 먹는)식당'에서 칸막이가 쳐진 독립공간에 앉은 혼밥족이 점심을 먹고 있다.

1코노미에 속한 20~30대의 젊은 층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다. 심지어 SNS, 인터넷 방송 등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사람들이 혼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 맺기에 지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단주의와 인맥 중심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조직과 회사는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할 대상이다. 대신 그들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만난다. 한 손으론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론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며 외부와 소통한다. 직접적인 관계 맺기가 싫어서 혼자 뭔가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소셜 다이닝'을 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인다.

김난도 교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이들 세대는 사회에 불만이 있지만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역인 동시에 내년 대선에서 변화의 중심세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세대는 자신을 위한 소비에 주저하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던 과거 세대와는 다르다. 이념보다는 합리와 상식을 중시하고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관성'에서 자유롭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신간 「2017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이기적인' 휴가여행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엔 여행하면 친구 ·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주에선 요즘 나홀로 여행의 인기가 뜨겁다. 단순히 구경하고 체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wellness)' 여행이다.

호주 여행 블로그인 '솔로 트래블러'가 추천하는 최고의 나홀로 여행 코스는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귄가나(Gwinganna) 휴양지다. 올해 세계 럭셔리스파 어워즈 우승지인 이곳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최고의 휴식을 제공한다. 가격은 2박 3일 패키지에 1인당 1,095~1,125호주달러(약 95만원)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는 세계 웰니스 여행시장의 규모가 2013년 기준 4,396억 달러(약 488조원)였지만 2017년에는 6,785억 달러(약 75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은 「뉴 노멀 시대, 40대와 언더독의 생존전략 – 당당한 결별」에서 '당당히 결별하고 혼자 설 것'을 요구한다. 김 소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졌다면, 이제는 상시적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인적 자본 전체가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회사도, 사회도, 국가도 나의 미래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다. 당당하게 회사와 결별을 선언할 만큼 개인이 먼저 주체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leemj@korea.ac.kr



1인 가구 증가는 고등교육과 취업, 고령화가 불러온 세계적 흐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주목할 만큼 높아져 100가구 가운데 12가구(11.8%)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유럽이 가장 높은 비율(28.9%)을 보이고, 북미(26.7%), 호주(25.7%), 동유럽(22.0%)이 그 뒤를 따른다. 반면 아프리카는 3.1%, 중남미는 7.8%에 불과하고, 아시아는 7.6%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37.9%), 독일(37.5%), 프랑스(33.0%), 영국(28.5%), 미국(28%)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32.7%로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쿄 같은 대도시는 4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1인 가구 증가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홀로 사는 사람은 1억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로 알려져 있다. 10년 사이에 1인 가구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 9%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율은 25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늘어나 전체 가구의 27.2%(520만가구) 수준까지 이르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기존의 가족체제가 더 이상 구성원에게 독점적으로 기존의 가족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고령화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수명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파트너의 죽음 이후에 홀로 사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기존의 가족체제가 더 이상 구성원에게 독점적으로 기존의 가족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편 젊은 세대는 교육이나 취업 같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 많은 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만 이뤄질 수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대도시 등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과 고용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면서 청년 세대들이 혼자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전 세계적인 흐름과 유사하다. 특히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변화가 시공간을 아울러 극히 압축적으로 이뤄져온 특성 때문에 그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제도적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다양한 탈가족화, 개인화의 증후, 교육과 취업으로 인한 독신 선택 또한 매우 집약된 경로를 보여준다. 게다가 중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혼의 급증 역시 1인 가구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 혹은 경제활동 단위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개인화'와 '개별화', 그로 인한 관계적 고립과 단절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화는 개인 사이의 유기적 의존관계가 심각하게 해체되거나 구성원 간의 적대적 관계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체성의 근거가 됐던 전통적 관계들의 해체로 인한 사회적 배제, 그리고 선택에 따른 삶의 다양성에 기인한 공동체적 연대의 약화는 개인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응집력이 감소하는 '응집의 위기(kohaesionskrise)'가 심화되고 가치와 규범이 통일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의미전달이 어렵게 되는 '규제적 위기(regulationskrise)'가 수반될 수 있다.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inyeon@mk.co.kr



바야흐로 대'혼'민국…
혼자, 작게, 빌려서, 간편하게



1인 가구 관련 상품, 서비스 중 간편가정식의 열풍도 뜨겁다. (사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즉석 삼계탕을 살펴보고 있다.

520만명.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수다. 전체 가구의 27.2%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유통업계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이유다.

일단 제품은 뭐든 작은 게 인기다. 생활공간이 협소한 싱글족에게 각종 생활필수품은 '소소익선(小小益善)'. 특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음식류의 경우 소포장 제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포장김치 브랜드 '종가집'의 경우 1㎏ 이하 소포장 김치 비중이 60%를 넘은 지 오래다. 오리온은 한 상자에 12개 또는 18개인 초코파이를 편의점 전용 낱개 제품으로 팔기 시작한 뒤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했다.

집도 작아야 잘 팔린다. 지난 6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 견본주택에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건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49㎡(약 15평) A타입이었다. 이 평형은 34가구를 모집하는데 1,449명이 청약 접수했다. 경쟁률이 42.6:1을 기록해 전체 평균(19.8:1)의 2배가 넘었다.

여행 · 문화업계에선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를 보는 '혼행족', '혼영족'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삼성카드 빅데이터에서도 포착된다. 최근 5년간 삼성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2인 티켓이나 밥값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문화시설(화랑 등)과 요식업종의 건당 결제금액 감소율은 각각 18%, 16%에 달했다. 조사대상 26개 업종 평균 감소율 13%를 웃돈다. 2~3인용을 한 번에 결제하던 것이 1인용만 결제하는 식으로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메가박스는 혼영족을 잡기 위해 아예 '싱글석'을 별도로 마련했다. 코엑스점 6~11관의 5열 전체가 싱글석이다. 옆 좌석과 테이블을 사이에 둬 커플관객 등쌀(?)에 치이지 않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한 것. 메가박스 관계자는 "최근 나홀로 관객이 증가하면서 싱글석을 찾아 예약하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렌털산업도 활황이다. 과거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정수기 등 주로 고가 상품을 렌트했다면, 이젠 커피머신 · 노트북 · 가구 · 매트리스 · 옷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대여해 사용한다. 덕분에 국내 렌털산업은 지난 2006년 3조원에서 올해 26조원으로 10여년 만에 9배가량 급증했다.

간편가정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열풍도 뜨겁다. 이마트의 HMR PB브랜드인 피코크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6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0억원)보다 37.5% 증가했다. 올해 1~4월 이마트 전체 매출 신장률이 5.2%인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하다. 피코크는 출시 첫해인 2013년 3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750억원, 2015년 1,270억원, 올해는 1,65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35년에는 763만가구(전체 가구의 34.3%)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다.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가족화와 장기불황을 먼저 겪어 1인 가구가 32.7%(2015년 기준)에 이르는 일본 사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라멘집이나 패스트푸드점에는 으레 나홀로 손님을 위해 칸막이로 된 1인석이 마련돼 있다. 심지어는 여럿이 함께 식당에 들어가 1인석에서 따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솔로 웨딩'이 유행으로 떠올랐다. 결혼 계획은 없지만 웨딩드레스는 입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길거리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다.

"일본에선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다. 덕분에 일본은 '혼자 살기 편한 나라'가 됐다." 김유영 동덕여대 일본어과 교수의 말은 갈수록 비혼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geochoi@kcti.re.kr



청년층 1인 가구, 문화 · 여가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부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 여가 분야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혼자'라는 단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3년까지는 '혼자여서 힘들다'가 1위였으나 2014년부터는 '혼자라서 좋다'가 1위를 차지했고, '혼자라서 편하다, 신난다'는 각각 5위와 9위를 차지했다. 더 이상 '혼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미국 28.0%, 영국 28.5% 등 주요 선진국의 1인 가구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 문화 ·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다.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있지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며 이질적인 생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사회동향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원은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외에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에서 다인 가구원보다 참여율이 높다. 또한 이들은 다인 가구원에 비해 스포츠 활동이나 창작적 취미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1인 가구원이 문화산업이나 스포츠산업의 소비자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노년층 1인 가구는 다른 유형의 1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약돼 있다.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문화 ·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며 1인 가구의 증가는 문화 및 여가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인 가구가 내부적 구성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문화 · 여가정책은 다차원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또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 여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인 가구가 이미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문화 ·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여가문화 향유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이므로 이들의 문화 · 여가활동을 도모해 사회적 유대감과 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인 가구의 문화 ·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문화 및 여가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자발적 요인에 의한 1인 가구는 다양한 문화체험, 스포츠 활동, 여행 등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는 반면,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여건에 의해 원치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문화 · 여가활동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화 및 여가활동의 주요 소비주체로서의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 여가산업의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정책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집단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1인 가구를 위해 특화된 문화 · 여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전체 가구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1인 가구 전체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주택, 최대 6년까지… 사회초년생 · 대학생 대상

정부는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 여성,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안전, 돌봄 등 분야별 내용을 확인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두자.

■ 주거

'국민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독신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책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45㎡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결혼해 2인 가구가 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민행복주택의 자세한 신청자격과 모집일정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룸형 주택을 건설 · 매입해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사업', 만 35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대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사업', 대학생 1인 가구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으로 제공하는 '희망하우징' 등을 통해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경우 LH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jeonse.lh.or.kr)'을,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설치한 '공공실버주택'을 눈여겨볼 만하다.

〈표1〉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또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 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 계층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자료: 행복주택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표2〉 2017년 모집 예정 행복주택 대학생 특화단지

지구명	세대주(호)	대학생 공급(호)	착공	모집	입주
공주 월송	200	120(60%)	2015.10	2017.1	2017.11
인천 용마루	1,500	750(50%)	2015.12	2017.8	2018.6
세종 서창	450	225(50%)	2016.3	2017.8	2018.6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2016.5)

■ 안전

안전지원 정책으로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위급상황 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112긴급신고'앱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에 방문해 '원터치SOS'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에선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자체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귀가 도우미들이 동행해준다. 부산시는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되며,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전송돼 원하는 시간에 찾을 수 있다.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 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며 서비스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돌봄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찾아가거나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이 돼 정서적 안정을 돕거나 건강 ·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을 제공한다(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나만의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즐길 수 있어… 주거 · 안전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때_ 2016년 11월 11일 오후 7시
곳_ 토즈 강남점
참석자_ **김주현**(직장인/여/33세/1인 가구 5년 차), **유정우**(개인사업/남/27세/1인 가구 8년 차)

나라경제_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형태가 되며 '솔로들의 세상'이 시작됐다고 한다.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20~30대 솔로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혼자 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김주현_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한 지 5년 정도 됐다.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 그땐 설레기만 했던 것 같다.

유정우_ 대학 진학을 계기로 혼자 살게 됐다. 2009년에 서울에 올라왔으니 햇수로 약 8년 됐다. 당시엔 부모님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되는 거라 무척 신나더라.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 피곤한 부분이 생기면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깨닫게 됐다.

나라경제_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면?

유정우_ 밥, 청소, 빨래 등 살림이 만만찮다. 빨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망쳐봤다. 퇴근 후에는 밀린 설거지와 집안일하기 바쁘다. 이제는 나름 노하우가 생겨 기본 이상은 한다. 부모님도 내 살림실력을 인정하신다(웃음).

나라경제_ 혼자 살아보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로망인데 환상이 깨지겠다(웃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씩 들어보자.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나.

김주현_ 배우고 싶던 취미활동을 주로 한다. 요즘은 우쿨렐레와 기타를 배운다. 혼자 살아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필라테스나 수영 등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유정우_ 영화를 보거나 여행, 독서 등 문화생활을 하며 보낸다. 성격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다간 평생 혼자 있을 것 같아 주말엔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활동을 하려고 한다.

나라경제_ 혼자 있는 것이 편한가? '혼밥', '혼술'이 유행이라는데 이를 즐기고 있나 보다.

유정우_ 난 즐기는 편에 가깝다. 편하더라. 맛집을 가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다른 팀과 합석도 된다. 영화를 봐도 감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애인과 가면 다음 데이트코스도 생각해야 해서 집중하기 어렵다(웃음).

김주현_ 나도 영화는 혼자 보는 편이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혼영'을 택했는데, 이제는 독립영화나 재개봉 영화 등을 골라보며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나라경제_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나.

유정우_ 물론 이상하게 본다.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뷔페도 혼자 가봤는데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애써 못 본 척했다.

김주현_ 고기뷔페라니 대단하다. 요즘 1인 위주의 바(bar)나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식당이 있어 간혹 혼자 먹어본 적은 있지만 나는 아직 혼밥이 불편하다.

나라경제_ 그런 식당처럼 '싱글족'을 염두에 둔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솔로 이코노미'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트렌드를 실감하나.

김주현_ 편의점만 가도 1인용으로 작게 나온 것들이 많아졌다. 원룸에서 살다 보니 조금 싸다고 대용량으로 구매했다간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짐스럽기만 하더라.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인터넷에서 소포장된 상품을 구할 수 있어 너무 편하다.

유정우_ 먹거리도 1~2천원에 양파 1개, 호박 1개 이런 식으로 포장돼 판매하니 좋더라. 단가는 비싸지만 혼자 쓸 만큼만 사게 돼 총액이 줄어 오히려 경제적이다.

나라경제_ 그렇다면 기존에 출시된 것 외에 새롭게 생겼으면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나.

김주현_ 여자들은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게 불안하다. 솔로를 위한 배달 · 청소 서비스 등 취지는 다 좋은데 막상 이용하려면 믿을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안전'을 확보한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유정우_ 맞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업체도 많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가격, 서비스, 품질, 후기 등을 비교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김주현_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인택배함도 많이 도입됐으면 한다. 우리 같은 20~30대는 원룸이나 빌라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택배함은 일부 아파트에나 있어 아쉽다.

나라경제_ 지출성향은 어떤가? 가족과 사는 또래들과 조금 다를 것 같다.

김주현_ 주로 주거, 공과금 등 고정생활비가 많이 나간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내 생활에 맞춰 쓰는 편이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스스로 좋은 걸 입고 먹자는 주의다. 내 것만 사면 되니 하나를 골라도 더 좋은 걸 사려고 하고, 자기계발에도 많이 투자하려고 한다.

유정우_ 6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비 비중이 큰 편이다. 그 외 소득의 60%를 저축하고 있고, 생활비는 조금만 발품을 팔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 크게 부담되진 않는 정도다.

나라경제_ 역시 주거가 가장 부담인가 보다. 그런데 아직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김주현_ 처음 집을 구할 때 정부지원 저리 대출을 알아보다 요건이 까다로워 결국 부모님 도움을 받았다. 제도적 장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생기는데,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유정우_ 우리 같은 1인 가구를 가정을 꾸리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언젠가는 결혼해서 제도권의 범주에 들어올 거라 생각해 관련 정책이 적었던 것 같다. '비혼족'도 최근에서야 언급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나라경제_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은 비혼족인가.

유정우_ 혼자 살겠다기보다는 예전처럼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혼이 공부처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미운우리새끼〉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며 나이 들어 혼자 살게 되면 박수홍처럼 클럽에도 가고 20대에 못해본 것들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웃음).

김주현_ 나도 마찬가지다.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내 주변만 봐도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의무적으로 결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나라경제_ 주변의 인식은 어떤가.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달라졌을 것도 같은데.

김주현_ 혼자 산다고 하면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본다. 결혼 안 한 것을 결핍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다. 그런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유정우_ 특히 부모님 세대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혼자 살며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학생 때와는 그 어감이 달라지더라. 예전엔 '대견'하게 고생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측은함'을 담고 있다.

나라경제_ 그렇다면 현재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김주현_ 10점 만점에 6점? 자기계발이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가족과 살 때보다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혼자 하니 비용도 적게 들어 좋은 것 같다. 나머지 4점은 외로움이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유정우_ 나도 6~7점 정도다. 혼자 사니 제일 좋은 건 시간적 여유와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울 거란 생각에 마냥 독립하기는 분명 생각할 것이 많다.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다. 대학 때만 봐도 부모님과 사는 친구들은 어머니가 깨워서라도 학교에 보내지 않나. 하지만 혼자 살면 그렇게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자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독립적으로 온전히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니깐.

나라경제_ 독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다. 그 외에 또 조언해줄 이야기가 있다면.

김주현_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경제관념이 필요하다. 돈을 마음껏 쓰기 쉽더라. 어떻게 알차게 지낼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 건강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나라경제_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위해 사회 · 정책적으로 제언할 것이 있나.

유정우_ 원탁에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이웃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하면 좋겠다. 이런 공간들이 골목골목 들어서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주현_ 연금이나 주거 등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도 함께 고민됐으면 좋겠다.

■ 진행 · 정리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miree21@si.re.kr



4종 4색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다.

불과 몇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개별화된 네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 30대 후반부터 40~50대까지 가족의 해체, 실직, 기러기현상 등이 복합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실버세대'인 고령자 1인 가구, 마지막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트렌드세터 골드족' 등 4종(種) 4색(色)의 1인 가구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1인 가구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골드족 1인 가구는 스스로 선택한 혼자 사는 삶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고 싱글문화도 창출하는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문화의 트렌드세터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만 골드족들은 주거 이동성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거선택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탓이 크다. 따라서 다양화된 가구규모에 맞는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골드족과 구분되는 나머지 세 개 집단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들 집단은 어쩔 수 없는 독신 그룹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자로서 사회와 연결이 약화된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높다. 커뮤니티의 안전성이 이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지역 문화적 요소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시킨다면 안전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불안한 독신자 그룹 등 경제사회적 약자인 1인 가구 그룹을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약하기에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적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비사회적 현상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 고독사라든지 사회와의 연결을 갖지 못한 청년층, 고시촌에 혼자 사는 중년의 반사회적 행위 등이 그러한 예다. 혼자 사는 40대 중년층은 부부 가구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자발적 1인 가구에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을 복원하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령 1인 가구인 실버세대의 경우 빈곤한 독거노인 대책과 함께 일정 정도의 경제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실버집단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체 노인 중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이 절반가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실버 싱글 마이너리티 지원체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4인 가구가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인데 사회는 이미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된 현실에 놓였다. 다양한 가구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될 때, 그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모자이크화된 다양성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습이 건강한 사회다.

내년엔



정민승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msj@hankookilbo.com

2013년 8월생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 신문기자로는 드물게 2014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한국일보에 육아휴직 아빠, 워킹대디의 이야기를 담은 '편파적 육아일기' 연재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어 달. 요즘 주변 아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확실히 느끼게 된다. 그 많던 저녁 약속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골프를 하는 이들에게 토요일은 온전한 휴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귀가 시간은 빨라졌고, 아이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었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다양하다. 이참에 아이들과 캠핑도 좀 할 요량으로 더 큰 차로 바꿨다는 이도 있고,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주말모임에 들었다는 이도 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뀐 저녁과 주말 풍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 때문에 젊은 시절에도 하지 않던 방황을 뒤늦게 하고 있다는 이도 있다.

일이 끝났어도 발길이 집 방향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인 증상. 주말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해장국을 먹으러 간다든가, 등산모임 같은 동호회에 드는 식으로 '건수'를 만들어 탈출을 꾀하는 이들도 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재미있지도 유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되기 때문이란다.

물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분명 힘이 더 많이 드는 일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그게 왜 그들에게 힘든지 대충 알게 된다. 아이들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든가, 기껏해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로부터 아빠는 왜 이렇게 집에 일찍 와서 잔소리를 하느냐는 타박을 듣는다고 한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녀석들한테 무시당하다 못해 구박까지 받을 때면 '내가 이러려고 애 낳아서 길렀나' 하는 자괴감도 들 것이다.



번개로 떠난 남이섬에서 아들과의 즐거운 한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들 대단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나도 육아휴직 한 번 해?' 지금의 여유로운 저녁과 주말은 법 시행 초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으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40개월 전, 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신고식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제 밥값은 하는 놈으로 키우겠다.'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방황하는 어린 나무들을 봤고, 더러는 주변 나무에 병을 옮기거나 숲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했던 터였다. 내가 심은 나무가 숲에 불을 내면 내가 더 이상 그 숲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고, 아들을 그렇게 키우겠노라는 다짐은 나의 생존욕구와도 닿아 있었던 셈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이 키우는 이야기고 또 그런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처구니없는 세상 이야기로 소주잔을 입에 털다가도 아빠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요즘,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의 하루하루는 보험이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리를 평생 돌봐줄 것도 아니고,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회사에서 물러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 아이들과 보내는 저녁 시간은, 그 다음 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기 싫어질 정도로 주말 동안 신나게 놀아주는 것은 보험 불입액을 늘리는 행위다. 세상을 등져야 남은 이들이 득을 보는 보험이 아니라 같이 마주보며 누릴 수 있는 보험.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내년엔 더 많은 아빠들이 일찍 귀가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아빠와 친해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훗날 덜 방황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웃음소리가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때 _ 2016년 11월 16일 오후 2시
곳 _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_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좌장 겸)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발등의 불,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신세돈_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많은데 오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이어 그가 주도할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2017년 세계경제를 전망해보고, 끝으로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 공약 중 한국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달라.

김창배_ 우리에게는 통상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 국내에는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장정책이 영향을 줄 것 같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감세, 인프라 투자를,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공정행위 대상국에 대한 압력 차원에서 보호무역, 환율조작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환율과 통상정책에서의 보호무역주의다.

윤덕룡_ 정리해보면 국제적으로는 반이민 · 반세계화, 국내적으로는 감세 · 규제완화, 그 다음 경기대책으로 인프라 투자와 재정정책이 있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별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데,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그 외에 사회정책으로는 오바마케어 폐지, 에너지정책은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다. 그중에서 반세계화 특히 FTA에 대한 재협상 또는 폐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다만 재정정책과 인프라 투자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신세돈_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많은 정책 어젠다를 내놨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반세계화, 좁혀서 얘기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사실 보호무역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미 의회가 견지해오던 철학이 그동안 의회가 내놓은 법안 구석구석에 포함돼 있다. WTO 체제가 1947년 이후 8차의 다자간 협상 끝에 완결됐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트럼프가 이것을 다 뒤집을 것 같은 우려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연 70년에 가까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 자유주의 · 개방주의 정신을 트럼프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을까? 의회나 학계 쪽에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없을까?

김창배_ 트럼프의 돌발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WTO를 탈퇴하겠다는 과격 발언도 했었으니까. 물론 미국 시스템 아래에서 그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트럼프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보호무역도 이전 정부 때보다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그리고 세계경제에 트럼프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덕룡_ 게임으로 본다면 미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사람들은 트럼프처럼 예측불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굉장히 힘들게 됐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45%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낮춰서 한 20% 정도 물리면 중국이 해피하지 않겠나(웃음). 그런 트럼프를 활용해 의회도 친자유무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득에 부합되는 쪽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게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선택적으로 산업별로 자국에 불리한 조항들을 틀림없이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또 무역구제조치 같은 것들은 행정부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_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짚고 들어올까?

김창배_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품목별 · 산업별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재협상 요구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가야 할 것 같다.

윤덕룡_ 한미 FTA 이후 미국경제도 일자리 등에서 상당부분 긍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법률서비스시장 개방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직 관철 안 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을 그런 부분에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있다.

신세돈_ 전면적인 재협상까진 아니겠지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국지적인 수정이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대비해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요구할 부분과 양보할 부분을 준비해야겠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미 · 중 간 무역분쟁 가능성이다. 45% 상계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텐데 그럴 경우 우리 무역에는 영향이 없을까?

김창배_ 미국이 관세라든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통해 중국에 어느 정도의 압박은 분명히 가할 거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초기에는 그런 액션을 취할지라도 미 · 중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조만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윤덕룡_ 김 박사님 말씀처럼 미 · 중 간에 갈등이 있기는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중 교역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글로벌 밸류체인상 우리가 중국에 반제품이나 중간재의 소재 같은 것을 수출해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우리의 대미수출도 줄어들 것이고 중국을 통한 수출도 줄어들게 될 테니까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신세돈_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수출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통상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그로 인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그렇잖아도 수출이 어려운데 앞으로 1~2년간은 교역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기대하긴 어렵겠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짚어보자.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중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달러화 가치가 강세로 가고 있으며, 당선 이후 4일 연속 다우지수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정책은 어떻게 기조가 잡혀질 것 같나?

윤덕룡_ 지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트럼프의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감세와 확대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또 미 · 중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던 물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감세, 인프라 투자를,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공정행위 대상국에 대한 압력 차원에서의 보호무역, 환율조작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환율과 통상정책에서의 보호무역주의다.

김창배 연구위원

건이 못 들어오고 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금리시장은 고금리 · 고물가 시대가 될 것이다.

김창배_ 트럼프가 사업가다 보니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할 것이다. 또 하나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저금리 쪽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환율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달러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을 원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신세돈_ 저는 김 박사와 의견이 좀 다른데, FOMC 위원이 총 12명인데 이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이 7명이다. 그중 현재 2명이 공석인데 이 2명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 매파(금리인상 주장)를 집어넣을 것이 확실하다. 현재는 비둘기파(금리인하 주장)와 매파가 반반인데, 트럼프로 인해 매파가 7명이 돼 FOMC는 금리를 올릴 구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공화당 지지세력은 전통적으로 중산층인데 이들은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에 우호적이다. 그런데 최근의 저금리로 금융산업이 많이 위축됐다. 위축된 금융산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고금리를 택할 것이 분명하다. 금리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 트럼프는 1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과 10년 동안 5조달러의 재정적자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윤덕룡_ 성공하면 좋겠다(웃음). 그런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가 지금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늘리겠다는 것은 4차 산업이나 환경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가 아니라 전통산업에서의 일자리다. 기존 일자리를 붙들어놓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연관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재정정책 방향이라 성장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김창배_ 단기적으로 미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늘리면 결국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 미국은 현재 완전 고용수준인데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미국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신세돈_ 미국의 GDP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18조달러인데, 그것을 매출개념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부가가치의 5배 정도로 약 90조달러가 된다. 그렇게 볼 때 인프라에 투자되는 1조달러가 1년에 모두 투자된다 해도 1% 남짓이다. 몇 년에 나눠서 투자된다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는 거의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비해 빨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 문제는 원화의 국제화 같은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경제성장 효과도 외부로 흘러나가게 돼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브렉시트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감산 합의가 세계경제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창배_ 11월 말에 있을 OPEC의 석유감산 합의와 관련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유 가격은 지금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셰일유 등 여러 대안이 있어 오르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윤덕룡_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8%로 오히려 올랐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파운드화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가시화될수록 영국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금융서비스업인데, 그중에서도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크다. 영국은 그동안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EU에서 탈퇴하면 유로화 거래를 할 수 없다. EU 역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경제에 브렉시트는 잠재돼 있는 불확실성, 불안요인 중 하나다.

신세돈_ 이제 끝으로 올해와 비교해 내년 세계경제를 전반적으로 전망해 보자.

김창배_ 미국은 단기적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고 유럽이나 중국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트럼프 효과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IMF, OECD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반세계화 흐름이다. 이것이 교역위축을 가져와 세계경제를 끌어내릴 것 같다. 두 번째는 재정정책 여력이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로 통화정책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재정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요국들의 국가부채비율, 재정건전성 등을 봤을 때 재정정책을 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더 커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안 좋을 것으로 본다.

윤덕룡_ 덧붙이자면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대응해 서로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MF, OECD가 내놓은 내년도 3% 이상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 한국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 혁신'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과연 내가 합당한 일을 할 역량이 되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
> **신세돈** 교수

신세돈_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얘기해 보자.

윤덕룡_ 우선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비해 빨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 문제는 원화의 국제화 같은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도 호환성 있는 국제통화를 갖게 되면 외환위기 가능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환율 논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김창배_ 기업은 간단하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과감히 털어내는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존 산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ICT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일궈나가는 데 기업가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정부정책이 맞춰지면 좋겠다.

신세돈_ 결국 공통의 키워드는 '개혁'인데 정부부처든 기업이든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 혁신'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과연 내가 합당한 일을 할 역량이 되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한 토론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토론을 마친다.

■ 정리 **허지혜** 나라경제 기자

일반인들이 흔히 궁금해 할 만한 사회현상을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믈리에'처럼 섬세하게 감별해 소개한다.

우리가 모르는 미국 우리가 몰랐던 트럼프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과 브래들리 효과

* 참고문헌
- 이현송,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과 인종」, 『미국학논집』, 46(3), 2014, pp.133~155
- 이현송, 「소득 불평등 인식의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20(3), 2016, pp.29~53
- Osberg, Lars and Timothy Smeeding, ""Fair" Inequality? Attitudes towards Pay Differentials: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3), 2006, pp.450–473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이 속담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맞을 줄은 미처 몰랐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선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의 승리를 확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가장 불평등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나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월 8일 대선 개표 결과가 트럼프의 승리로 굳어지자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Our Unknown Countr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며 절망적인 심정을 피력했다. 미국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읽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 담긴 글이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담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들이 80~90% 확률로 힐러리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자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노동계층의 뿌리 깊은 불안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기득권을 잃고 지난 20여년간 소득 감소를 경험한 블루칼라의 백인 남성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이번 선거에 표출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미국의 사양화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가 이변을 일으킨 것이 이를 잘 입증한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지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면서 미국판 브렉시트가 탄생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인들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현송 교수가 발표한 논문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과 인종」(2014년)과 「소득 불평등 인식의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2016년)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불평등한 사회지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반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국인은 유럽인과 비교할 때 자신의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거나 사회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 불평등 인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대체로 이를 뒷받침하며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하나의 국



지난 11월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민으로서 갖는 강한 동질성으로 개인주의와 기회 평등의 가치관 공유)'와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독특한 기원과 역사 발전 과정, 정치 제도 등을 가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국가라는 생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다. 즉 미국인은 기회 평등에 주로 관심을 가질 뿐 결과의 소득 불평등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물론 오스버그와 스미딩의 주장처럼 미국인의 경우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유럽인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인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가난한 사람 쪽보다는 부자 쪽에 관심이 더 커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소득 불평등 확대되는 미국, '샤이 트럼프(shy trump)'로 속마음 드러내

그러나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속도가 1980년대 급격히 진행되고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면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2008년 경제위기로 일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하락한 반면 소득 분포에서 최고 1%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고 1%의 가구가 1979년에는 전체 세전 소득의 8.9%를 차지했다면 2012년에는 22.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분포의 하위 20%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12.1%나 감소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부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기회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소득 불평등 그 자체에 관심이 높아졌다. 더 이상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의 불평등을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미국의 신조를 기대하기란 어려워졌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든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의 공약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인들의 소득 불평등 인식에 변화가 왔음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패인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숨은 유권자를 의미하는 '샤이 트럼프(shy trump)'와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에서도 여론조사의 예측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흑인 후보였던 토머스 브래들리가 출마했는데 이번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출구조사에서도 앞섰다. 그렇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1%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 이처럼 선거의 결과가 여론조사와 달리 나오는 것을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도 이와 유사하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여성 · 무슬림 비하 발언과 인종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실 부끄럽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신조를 따르지만 내면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관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권자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백인층 상당수가 자신의 인종적 편견을 숨기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브래들리를 선택하고 투표에선 자신의 인종적 견해를 드러냈던 데자뷰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올해는 유난히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Our Unknown Country)'가 많은 것 같다. 정말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국민신뢰 회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2017년 1월 개통

윤병태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y0825@mosf.go.kr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으로, 2016년 기준 60조3천억원에 이른다. 복지, 고용, SOC, 농어촌, 문화,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이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눈먼 돈'으로 대표되듯 좋지 않다. 오히려 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된 보조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보조사업의 중복 · 부정수급이 많다는 응답이 72%, 주변에서 중복 · 부정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였으며, 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을 제시하는 비율이 44%에 이른다. 실제로 검경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보면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예산 누수를 근절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2015년 9월에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고, 그해 10월에 추진주체로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해 총예산 352억원을 투입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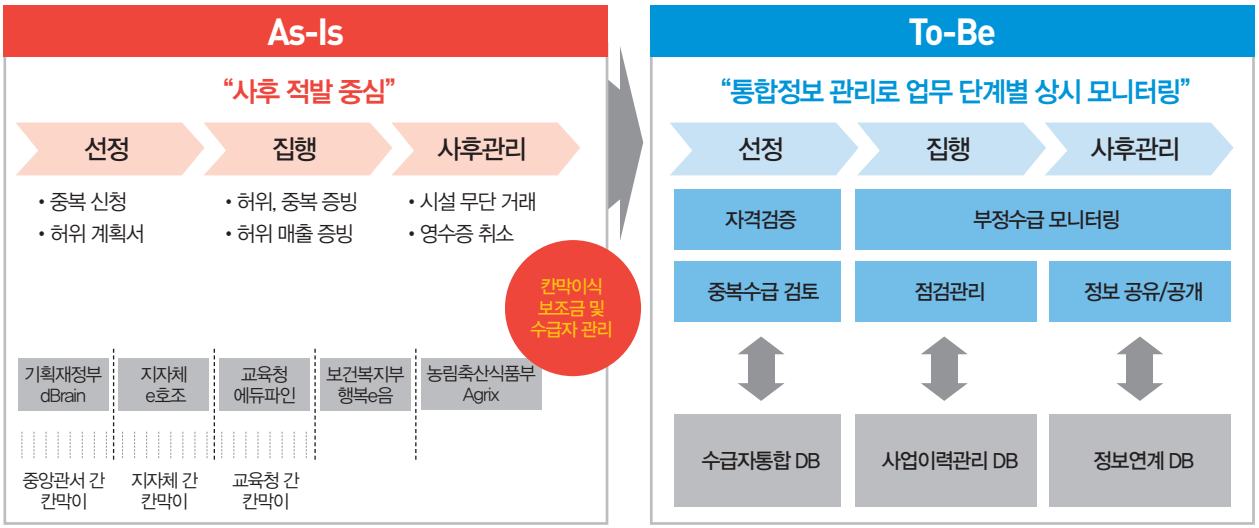
예산편성 · 교부 · 집행 · 정산 · 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 처리과정 통합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3대 목표는 첫째, 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보조사업 단계별 각종 검증장치를 도입해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둘째, 업무 표준화, 전자증빙에 기반한 온라인 정산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개인별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2017년 1월에 사업관리, 집행 부분을 1차로 개통하고, 부정수급 방지,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등 전면 개통은 2017년 7월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복 ·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현행 보조금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관련 정보의 단절과 수기처리에 의한 비효율이다. 보조금은 각 소관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한 부처 내에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중앙정부→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광역 · 기초)→민간보조사업자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집행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보가 부처별 · 단계별 · 사업별 칸막이로 분절되고, 현재 재정시스템에 의한 관리범위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단계까지여서 보조사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정리 등 정산, 사후관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업관리를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신청, 허위증빙 제출 등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첫째, 예산편성 · 교부 · 집행 · 정산 · 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440여개 기관 및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각 기관에 분산된 보조금 관련 제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셋째,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범위를 세부단위사업에서 내역사업까지,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집행내역까지 확대해 보조금의 실질적 최종 귀착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시스템 구축 후 업무 변화내용



보조금 생애주기별로 7번에 걸쳐 시스템 검증

본 시스템 구축의 주요내용과 구축 후 업무변화 내용으로는 첫째, 촘촘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조금의 중복 ·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단순한 추적관리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자 선정 · 집행 등의 보조금 생애주기별로 시스템 검증이 7번에 걸쳐 철저하게 이뤄진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①유사 · 중복사업 검증을 하고,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를 선정하기 전에 ②자격검증과 ③중복수급 검증을 한다. 보조금을 지출하기 전에는 ④거래 유효성 검증과 ⑤가격 적정성 검증을 하며, 보조금 집행 후에는 ③중복수급 검증이 다시 이뤄진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⑥중요재산 사후관리 검증을 하게 되며, 전 과정에서 보조금의 누수위험을 탐지하는 ⑦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도록 구축됐다.

둘째,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중앙부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을 지자체 세부사업(예산과목)과 매핑해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끊김 없도록 꼬리표를 부착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라이프사이클과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 ·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사업신청→신청자 자격검증→사업자 선정→결과통지 등 일련의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행된다.

셋째, 중앙 ·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 시 별도계좌 통합예치→지출증빙 검증→거래처 대금 자동이체 과정을 거침으로써 허위 · 중복증빙 등 증빙 관련 부정소지와 민간의 보조금 유용 여지를 없앴다.

넷째, 대국민 포털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으로 국민 편의성이 제고되고, 보조금 집행현황, 운용성과 등의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개통에 따라 중복 ·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 방지 등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절감되고(2015년 9월 BPR&ISP 결과), 기존 수작업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업무편의가 높아진다. 특히 정산업무 소요기간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개선되며, 맞춤형 보조금 정보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보조금 전달경로 파악, 비목 · 거래처 등 최종 집행정보 확보로 재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분석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시스템의 구조와 사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기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추진단에서는 별도의 사용자 교육팀을 구성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보조사업자 등 전국의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 연초로 바쁜 상황이지만 새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각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요망된다. 또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왔던 보조사업 관리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자격검증 항목, 속성정보 항목 등록 등 기초적인 사업특성 입력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과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LED 스탠드 가격 · 품질 비교 정보

광 성능 · 수명 등 품질 차이 있어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은 에너지효율과 수명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제품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의 가정용 'LED 스탠드'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형광등 스탠드를 대신해 'LED 스탠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조사 12개 LED 스탠드 제품을 대상으로 광 성능, 수명 성능, 안전성, 전자파 내성, 제품특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글_민태홍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 주임연구원

* 본 기사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광 성능 제품별로 차이 있어

시험 결과, 주요 성능인 소비전력 대비 밝기(광속)를 나타내는 광효율, 자연색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 등 광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광 효율은 소비전력(W)당 밝기(광속, lm)로, 광 효율 수치가 높을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우수한 제품이다. 조사대상 제품의 광 효율을 확인한 결과 롯데쇼핑 'OP-9378', 백산엘앤티 'ELX-7300', 한국3M '3M LED 7500' 등 3개 제품은 광 효율이 60lm/W 이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디비케이 'DS-200LS', 루체스 'LE-200' 등 6개 제품은 광 효율이 50lm/W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다이아소닉테크놀로지 'DL-97TH', 프리즘 'LSP-M08', 한일가람 'ST5000' 등 3개 제품은 광 효율이 45lm/W 이하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LED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광과 유사해서 물체 본연의 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 연색성에서는 다이아소닉테크놀로지 'DL-97TH', 한국3M '3M LED 7500' 등 2개 제품 연색성이 91 이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롯데쇼핑 'OP-9378', 삼정인버터 'SL-830' 등 9개 제품은 연색성이 81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일가람 'ST5000' 제품은 KS 기준인 연색성 80 이상에 미달했다.

현재 LED 스탠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C 7656)에서는 광원에서 40cm 아래 중앙 1개 표면과 중앙에서 30cm 간격으로 8개 주변부 표면의 조도 범위를 600~1,500lx(럭스)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들이 책상 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광원으로부터 40cm 떨어진 표면에서 밝기를 측정한 조도시험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의 중심은 KS 최소 권장기준인 '600lx'보다 밝았다. 하지만 중앙 1개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주변부는 기준(KS 조도 권장 기준: 600~1,500lx)에 미치지 못해 다소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 성능은 일부 제품 문제 있어

LED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 2,000시간 사용 후 밝기(광속)의 변화를 확인한 수명 성능 시험 결과, 삼정인버터 'SL-830', 홈플러스 'HB-100' 등 2개 제품이 초기에 비해 20% 이상 밝기가 저하되는 등 한국산

주요 시험 · 평가 항목 및 방법

시험 · 평가 항목		시험 내용 및 방법	시험 · 평가 기준
광 성능	광 효율	소비전력(W)당 광속(빛의 밝기, lm)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우수함	KS C 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준용
	연색성	자연광(햇빛)에서 보이는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함	
	조도	스탠드가 40cm 떨어진 바닥면을 비출 때 중심과 그 주변의 빛의 밝기(lx)를 확인	
수명 성능	광속유지율	초기 광속(밝기) 대비 장시간(2,000시간) 점등 후 광속 비율로 높을수록 우수함	
안전성	누설전류(감전보호)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KS C IEC 60598-1 (등기구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준용
	전도안정성	6°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는지 확인	KS C 7656 준용
전자파 내성		외부의 전자파 영향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 정전기 내성, 서지(surge),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RF 전도 내성, RF 방사 내성을 확인	KN 61547 (일반 조명기기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적용
제품 특성	광속(밝기)	초기(100시간 후) 점등 시 빛의 밝기(lm)를 확인	KS C 7656 준용
	소비전력	초기(100시간 후) 점등 시 소비전력 확인	
	보유기능	밝기 · 색온도(광원의 색) 조절, 타이머, 발광부의 상하 · 좌우 조절 등을 확인	확인시험
	무게	제품의 무게를 확인	

업표준인 KS 기준(초기 성능 대비 9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수명 성능 개선을 계획 중임을 알려 왔다.

외부 전자파에 의한 이상 동작 유무를 확인한 전자파 내성 시험에서는 백산엘앤티 'ELX-7300' 제품은 전원이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알려 왔다.

손에 닿는 부분에 전기가 누설되는지, 제품이 6° 기울어진 표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시험 결과인 'LED 스탠드'에 대한 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LED 스탠드 사용 시 주의사항

- ☑ 권장 조도보다 밝기가 어두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조명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제품이 넘어지면 파손 및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울어진 표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제품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사용한다.
- ☑ 너무 밝은 빛을 직접 볼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광부를 직접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 ☑ 제품에 각도 고정용 돌림 나사가 있는 경우 나사를 풀어 제품의 각도를 변경한 후, 측면의 돌림나사를 조여 확실히 고정시킨 후 사용한다.
- ☑ 제품의 발광부 주변에 종이를 붙이거나, 수건을 얹는 등 발광부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 ☑ 제품 구입 당시 제공된 전원장치(어댑터) 이외의 다른 전원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동작시키지 않는다.
- ☑ 젖은 손으로 조작하거나 젖은 걸레로 제품을 닦지 않도록 한다.
- ☑ 동작 중 제품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 폭발이나 발화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제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바쁘다 시즌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푸른 지구와의 약속, '기후변화'에 맞서다



"지난 10월 5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제18호 태풍 '차바'에 잠기는 것을 혹시 보셨어요? 아휴! 흡사 영화 〈해운대〉를 다시 보는 듯했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온갖 기상이변들이 기후변화와 크게 관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면 인류의 생존까지도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였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의 설명이다.



최민지 과장

2008년 3월에 문을 연 기후변화협력과는 최민지 과장을 비롯해 13명이 근무한다.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 산업부문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후변화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운영

올여름은 정말 무더웠다. 사람들은 '무서운 여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구촌 곳곳이 뜨거웠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탓이라고 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 가뭄, 홍수 등을 겪으면서 기상이 전과 다르다고 느낀 것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사람, 자연, 사회 ·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책에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과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 적응하는 방법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산업화 이후 이미 많은 온실가스가 축적돼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도 꼭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업무는 백진우 사무관과 이윤성 사무관을 주축으로 강효윤 주무관, 그리고 김동욱 주무관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다가올 재앙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5년 주기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에 환경부를 포함한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을 수립 · 시행 중이며, 4개 정책부문, 1개 정책기반, 20개 주요과제로 이뤄져 있다. 노인 · 장애인 · 만성질환자 등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고, 통합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 간, 기관 간의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장기적 기후변화 적응 R&D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주로 국책연구기관과 장기과제를 두고 열띤 논쟁도 마다 않는 기후변화협력과의 브레인이다.

특히 백진우 사무관과 강효윤 주무관은 바쁜 와중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정 · 운영하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20개 대학원을



(왼쪽부터)권춘경 사무관, 공윤선 전문관, 김지영 전문관, 박경미 주무관

지정 · 운영해 관련 전문 분야의 석 · 박사 252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민간기업 · 연구소 · 공공기관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권춘경 사무관과 곽종선 주무관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제품과 서비스의 원료채취, 수송 · 유통,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소비를 유도하는 제도]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최초 출시한 그린카드[신용카드의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 그린카드 사용자가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업무와 함께 각종 서무를 챙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세종시가 고향인 강윤정 실무관은 각종 회의 준비, 홍보업무 지원 등 기후변화협력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정상필 사무관과 안병길 주무관은 탄소포인트제도[가정(아파트), 상가 등에서 전기 · 도시가스 ·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되게 광역 · 기초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감축수단을 발굴 ·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늘 이들의 손을 거친다. 특히 국고보조금 정산 시 안병길 주무관은 마치 수험생같이 밤을 지새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동욱 주무관, 백진우 사무관, 강효윤 주무관, 이윤성 사무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및 기후변화 알리기 홍보 · 캠페인 전개

박경미 주무관은 권춘경 사무관과 함께 가정 · 상업 ·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인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 2008년 10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추진한 운동이다.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많아짐에 따라 2014년 3월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친환경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요즘에는 전국 그린리더(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가)들의 축제 마당인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준비 때문인지 야근이 잦다.

아직 미혼이자 홍보업무 전문가인 김지영 전문관과 공윤선 전문관은 국민들에게 기후변화 인식을 심어주고 저탄소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홍보 ·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 전후 1주일 동안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설날 · 추석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 고속터미널, 공항 등에서 '저탄소 명절' 캠페인, 전력수요가 많은 하 · 동절기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쿨(Cool)맵시' · '온(溫)맵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공익광고 제작에도 참여하고, 전기자동차 판촉 활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우리 국민은 '서제막급(噬臍莫及; 일이 그릇된 뒤에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이라는 말처럼 각자가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는 등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이에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적응', '실천', '저탄소'라는 말이 들리는 기후변화협력과가 흘리는 구슬땀은 더욱 값지다.

■ 글 · **권춘경** 사무관



(왼쪽부터)곽종선 주무관, 강윤정 실무관, 정상필 사무관

STARTUP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estima7@gmail.com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취미. 전 조선일보 기자, 전 라이코스 CEO, 테크블로거로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운영

좌초 위기를 맞은 '창조경제'에 바란다

최순실 스캔들 격랑에 '창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년간 전국에 생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 정권이 끝나면 창조경제의 미래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스캔들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민간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아서 끌고 온 지 올해로 3년째인 내게도 관련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3년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스타트업이 아주 많아졌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드라이브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덧붙인다. 한국스타트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발표를 할 때도 창조경제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 장 집어넣는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대중의 창조경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다.

사실 창업을 북돋우며 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노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인류에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에 기존 대기업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더 잘 대응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만인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란 슬로건을, 인도나 태국은 '스타트업 인디아', '스타트업 타일랜드', 프랑스는 '라 프렌치 테크' 등의 제목으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경제'라는 브랜드는 바뀔지언정 창업육성과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고 몇몇 재벌대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다양성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 노쇠한 기존 대기업에도 경쟁을 통해 긴장감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이어진다.

다만 그동안 창조경제정책에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우리의 창업정책이 앞으로는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적어본다. 첫 번째로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에서 자율적이고 민간 주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톱다운 방식이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해 지원하기보다는 위에서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IoT(사물인터넷) 등의 주제를 정하면 그에 맞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식이었다. 또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가 잦았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스타트업 지원보다는 행사 준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많았다. 이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뒤를 바라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정권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이 강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통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5~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

세 번째로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이들이 잘 성장해서 상장이나 매각이라는 엑싯(exit)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시장을 만들어주는 구매정책, 규제완화정책 등 할 일이 정말 많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니 한국은 온갖 촘촘한 규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나라였다. 대기업에는 엄격하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작은 기업에는 너그럽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유연한 규제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아무쪼록 창조경제를 통해 씨앗이 뿌려진 수많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 이 회사들이 한국의 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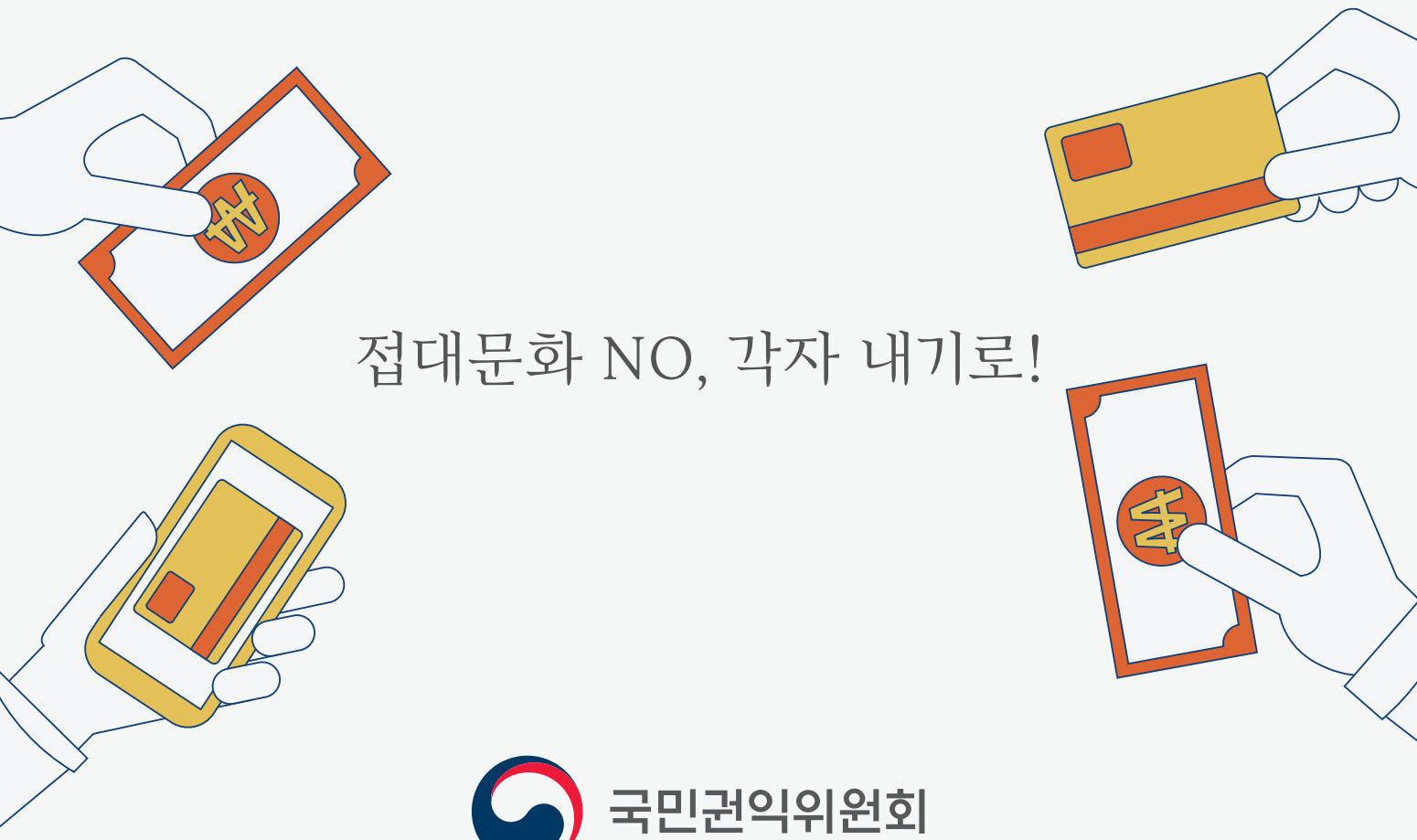
청렴韓세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여러분의 참여로 이제 시작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시행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인간과 인공지능 간 대결이란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덕분에 이제는 AI가 그리 낯설지는 않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4차 산업혁명과 IoT, AI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온 느낌이다.

그리고 또 하나,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리며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네트워크 통신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내용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로 무궁무진한 활용 범위를 자랑한다. 현재 모든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인터넷을 활용하듯 미래에 모든 비즈니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리 생활과 맞물려 진화를 거듭하는 블록체인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본다. Now! 블록체인!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 블록체인



NOW

도입

다양한 직거래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IoT환경에 적합한 도구이자 기회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gpchoi@kif.re.kr

올해 들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블록체인(Blockchain)은 중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증명(proof of work)의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를 사방에 흩어진 분산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이다. 초기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면서 공동거래장부의 진정성을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과거 중앙통제방식의 금융시스템을 분산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사실 P2P(peer to peer) 거래의 수단인 혁명적 비트코인(Bitcoin)도 밝게 조명된 공개장부를 여러 곳에 복사해 분산 유지케 함으로써 보안을 지키는 획기적 발상의 블록체인 토대 위에서 제안됐다. 그야말로 중개인 없이, 평소의 신뢰 토대가 없이도 당사자들 간 거래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결된 노드의 과반수 이상을 고치지 않는 한 작위적 개입이 어려워 보안상의 이점도 부각된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 · 재테크 · 인테크'에서 참관객이 비트코인 국제송금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개방성과 투명성, 안전성 확보한 블록체인 다방면에 활용

우리가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중간의 신뢰확인 작업에 소요되는 수많은 과정과 수단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만 해도 거래소의 많은 기능이라든지 공증이나 증명, 보험 등 다양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둘째, 모든 기록의 변조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유지될 수 있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신뢰를 입증하려는 모든 서비스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보석이나 그림의 원산지 증명, 등기서비스나 재산권보호가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록은 획기적인 개혁드라이브로 간주된다. 셋째, 소비자들의 효용과 편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차 때마다 입증하는 과정을 되풀이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보가 공유될 경우 간단한 자기확인 절차만으로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둔 다수의 참여를 통해 P2P 거래의 장애요소였던 이중성을 연결된 검증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뿐 아니라 복잡한 중간개입 및 입증과정에 기초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예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제송금서비스의 경우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화를 위

>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제송금서비스의 경우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화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은행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도 블록체인 기반의 소액결제가 도입되면 관심 있는 주제들만 선별해 열람하고 건별로 지불하는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해 비트코인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은행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도 블록체인 기반의 소액결제(micropayment)가 도입되면 관심 있는 주제들만 선별해 열람하고 건별로 지불하는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개인들의 평소 습관에 기초한 보험서비스나 건강관련 제반 서비스의 질적 제고도 가능하다. 또한 채권, 주식, 특허, 미디어, 개인 창작물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스마트그리드 과금 등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체제와의 상충위험이 적은 기초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등기부 등본과 같은 법률서류 및 재산권의 등록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계약'으로 발전

이제 초기 비트코인을 가능케 했던 블록체인 기반기술은 본격적으로 모든 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스마트 계약시스템으로 무단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분쟁발생 시 특정 시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손쉬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항공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통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SCM 네트워크 내 모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당연히 각 단계별 추가되는 계약에 따라 부품 공급과 지불 계약이 스마트 계약대로 자동 이행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심지어 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성과 보안성을 제고하고 선거나 투표관련 고질적 문제해결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구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신기술이나 혁신이 그러하듯 인간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접목되려면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신중하게 따져보면 중개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비용절감의 이면에 또 다른 형태의 상당한 비용이 잠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블록체인의 개정판인 '이더리움(Ethereum)'의 해킹사건을 보더라도 완전한 분산체제의 위험관리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생태계 차원에서 다수의 참여가 소수의 간섭으로 인해 무차별적 피해로 커나가지 않도록 집합적 차원의 지혜가 필요하다. 분산시스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필요하며 규제나 감독도 형태는 바뀌겠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서비스다.

결론적으로 소위 과거체제(legacy infrastructure)의 발전적 진화문제와 연관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의 특징을 가지는 훌륭한 대안의 기반으로서 향후 수년 이내로 블록체인은 크게 발전해 다방면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간 다양한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반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모든 것이 연결된 IoT환경에 적합한 도구이자 기회이다. 모든 것이 연관되면서 모든 경제적 가치의 전달과 거래에 있어 다수에게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허용되고 수직적 통제가 분산적 연관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블록체인과 같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거에 수용하기 위해선 엄밀한 시장검증과 이를 받아들이고 인류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결국 시장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주체들의 출현,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기득권들의 자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려야 블록체인은 비로소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커나갈 수 있다.

NOW

현황

제4차 산업혁명 실현할 블록체인 금융권 도입은 더욱 가속화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진흥팀장
kangpy@kisa.or.kr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의 불특정 다수 간 안전한 거래기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심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구현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의 성공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즉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중앙관리자 없이도 전체 참여자들 간 공동의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 관리를 통해 거래내역의 위 · 변조를 차단, 화폐 발행부터 거래까지 실현해 냄으로써 반신반의하던 세계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는 기폭제가 됐다.

거래내역을 암호기술로 체인처럼 연결, 보안성 · 투명성 · 편리성 높여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장외시장 주식거래[나스닥 링크(Linq; 체인닷컴 등 6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전자증권을 발행)] 및 해외송금[리플(Ripple; 미국의 핀테크 업체로 해외송금 수수료를 은행의 10% 수준으로 낮춤.)] 등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하며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표〉 국내 금융 분야 블록체인 활용현황

KEB하나 은행	R3CEV에서 지급결제와 인증관련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검증(2016년 11월)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반 골드바 구매 교환증 및 보증서 발급서비스 출시(2016년 8월) 외환송금 등 금융서비스 모델 검토 중
KB금융 그룹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2016년 2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시스템 구축(2016년 4월) 핀테크 업체인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기반 개인인증서비스 예정(2016년 11월)
코스콤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스케일체인과 자본시장 도입 여부 기술검증(2016년 8월) 하이퍼레저(hyperledger)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계획 발표(2016년 10월)

국내의 경우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유수의 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회원사와 공동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제공 등 수행)에 KEB하나, 신한, KB국민, 우리, IBK기업 등 5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업무 적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기술검증(PoC) 수행과 거래 증빙자료 저장 및 개인인증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해외송금, 자산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연내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출범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에 대한 접근 및 관리가 모든 참여자에게 오픈돼 있어 분산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응용서비스 특성에 따라 프라이빗(private)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장부의 관리 및 공개 수준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그 응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은 사람을 비롯해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참여주체들 간의 자율적 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제3자에 의

>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업무 적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기술검증(PoC) 수행과 거래 증빙자료 저장 및 개인인증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해외송금, 자산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연내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출범 및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을 넘어 산업 전 분야로 적용 확산

독일의 스타트업 슬록(Slock)은 부동산 임대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고안했는데, 입주자가 부동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건물에 부착된 스마트 자물쇠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계약내용이나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중간 매개자 없이 입금만 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IBM은 지난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연구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인 어뎁트(ADEPT)를 소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세탁기에 세제가 떨어지면 세탁기 스스로 세제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음원업체인 플레지뮤직(Pledge Music)은 제작자가 음원을 공개하고 이를 내려받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제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 독일 스타트업 슬록의 창업자 크리스토프 옌취가 런던에서 열린 이더리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장착된 스마트 잠금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slock.it 홈페이지)

공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과 연계한 전자시민권 발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각종 선거의 투표관리 운영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대학의 강의수료증을 블록체인을 이용해 발급해 주목받았고, 중미의 온두라스는 국가 토지대장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도 공공서비스 전 영역에 블록체인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록 관리 및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으며 미국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의 장부(디지털 기록) 관리를 통한 전자화 · 자동화를 촉진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 제고는 물론, 투명성을 기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실현해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과 융합돼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언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준비하라!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블록체인연구센터장
deb_blockchain@naver.com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경제구조는 신뢰기관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다. 즉 현재의 경제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가정은 신뢰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뢰기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했다. 한편으로는 신뢰기관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신뢰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하고자 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난다. 왜 우리는 신뢰기관을 가정해야만 할까. 신뢰기관이 본질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기관이 없는 경제구조는 불가능한가? 인류 역사상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해결점을 제시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신뢰기관 없이도 현재의 경제구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의 신뢰기관 없이도 P2P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신뢰성 확보 가능해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미국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의 외환송금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국내은행, 미국은행, 그리고 양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결제기관 등이다. 물론 현실은 더 복잡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환송금의 경우 이러한 신뢰기관들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 이외에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아질까. 신뢰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신뢰기관들에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수수료 등)을 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송금 수수료는 평균 6% 정도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평균 1% 내외로 혁신적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외환송금 수수료의 전 세계적인 평균은 15%에서 20%로 알고 있으며, 이 또한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1% 내외가 된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파괴적인 기술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주요 경제주체인 은행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을 활용한 외환송금에서 은행 역할이 사라지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신뢰기술을 기반으로 은행 없이 상호 간 외환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좁은 의미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가 확보된 전자문서의 P2P 분산저장기술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필자는 블록체인을 P2P 신뢰네트워크 또는 P2P 신뢰비즈니스 네트워크라 정의한다. P2P 신뢰네트워크란 네트워크의 신뢰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3의 신뢰기관(TTP; Trusted Third Party) 없이 P2P 네트워크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신뢰의 의미를 확대하게 되면 블록체인이 현재의 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의 신뢰는 P2P 네트워크에서 전송되고 처리되는 데이터(또는 거래 내용, 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새로운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법 ·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진흥법'을 제정해 블록체인에 대한 법 · 제도의 일반적 틀을 만들고, 이후 「전자정부법」은 블록체인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자본시장법, 그리고 사물인터넷진흥법은 블록체인사물인터넷진흥법 등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3의 신뢰기관 없이도 P2P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현재 제3의 신뢰기관을 가정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P2P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현재 제3의 신뢰기관을 가정해 서비스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어 파괴적 기술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틀을 혁신시켜 더욱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 필요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방향은 기술적 측면과 함께 관련 법 · 제도 정립 등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블록체인 도입 시 먼저 새로운 관점(신뢰기관 대 P2P)에서 새로운 법 · 제도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법 · 제도 틀 안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선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금융거래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즉 P2P 금융거래를 중앙집중식 금융거래의 법 · 제도 틀 안에선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법 ·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진흥법'을 제정해 블록체인에 대한 법 · 제도의 일반적 틀을 만들고, 이후 「전자정부법」은 블록체인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자본시장법, 그리고 사물인터넷진흥법은 블록체인사물인터넷진흥법 등이다. 이러한 법 · 제도 틀 안에서 P2P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마도 신뢰기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할(신뢰성 보증)이 새로운 역할(공정한 관리자)로 대치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관련 법 · 제도 제정과 함께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 또한 정확히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 문제(scalability,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속도를 의미)는 이미 많이 분석돼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해결하고 있어 필자는 정보보호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즉 블록체인의 특성인 투명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밀성 및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정보보호문제 또한 블록체인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적 측면의 블록체인 발전방향은 바로 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내재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블록체인의 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암호기술이 이용된다. 다양한 암호기술 중 블록체인의 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하는 암호기술은 크게 영지식증명시스템(ZKIPs; Zero Knowledge Interactive Proof system)과 비밀계산(secure computation)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정보보호 기능이 내재된 블록체인을 암호블록체인이라 명명하고 블록체인플랫폼과 암호기술플랫폼을 융합한 암호블록체인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2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내 블록체인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모든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인터넷을 활용하듯 미래에 창출되는 모든 비즈니스는 암호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세상이 신뢰기관 중심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면 도래할 세상은 신뢰기관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P2P 신뢰네트워크의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모든 경제주체들의 위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00억원 규모의 VR(Virtual Reality) 전문펀드 조성

VR · AR 생태계 구축 방안

김영문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장 mun90@korea.kr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10대 K-ICT 전략산업을 선정해 지능정보, 디지털 콘텐츠, 5G, SW 등 융합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게임, 방송, 테마파크,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신시장을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세계시장도 2016년 22억달러에서 2025년 800억달러 규모[가상 · 증강현실 세계시장 전망 기준(2016년, 골드만삭스)]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들도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으로 K-pop 등 한류의 저력과 세계최고 수준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서울 상암동에 VR 클러스터 조성, VR 전문펀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VR 분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전략 프로젝트' 9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부터 사업화까지 집중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2016~2020년)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총 4,050억원(정부 2,790억원, 민간 1,260억원)을 투자해 전략 분야에 대한 R&D와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VR 플랫폼 고도화 등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2017~2020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자해 라이브스티칭, 3D깊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VR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3D객체인식과 같은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플랫폼을 개발한다. 또한 표정과 제스처를 인식해 감성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눈동자 추적기술로 반응성 증대를 통한 초실감 인터랙션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VR · AR 디바이스 경량화를 통해 착용감을 높이고 고시야 · 해상도 지원기술을 확보해 몰입도 개선을 지원한다. 그리고 VR · AR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지러움, 멀미, 피로감 등을 유발하는 인지부조화 현상 등 휴먼팩터(human factor)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2년간 정부, 민간이 총 600억원(올해 총 298억원)을 투입해 대-중소기업, C-P-N-D(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해 초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V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성이 높은 게임체험, VR 테마파크 등 5대 분야에 R&D,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등을 연계해 국내 중소벤처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교육 · 훈련, 의료, 국방, 커머스 등 융복합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VR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2017년간 매년 120억원을 미래부에서 출자하고 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총 400억원 규모의 VR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VR 분야의 게임, 테마파크, 교육 등 분야별 원천기술, BM(비즈니스 모델)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국내 VC(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를 대상으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총 7년간(4년 투자, 3년 운용) 초기 기업이나 성장기에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VR 기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VR 분야를 지능정보, 콘텐츠, 바이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1개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016~2017년간 매년 120억원을 미래부에서 출자하고 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총 400억원 규모의 VR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VR 분야의 게임, 테마파크, 교육 등 분야별 원천기술, BM(비즈니스 모델)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 조성

미래부는 VR 기업의 입주지원, 인프라 지원, 기술지원, 상설전시 등 다양한 지원기능이 집적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VR 클러스터(가칭)'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 미디어 기업들을 비롯해 문화 · ICT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암동을 VR 관련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한다. 누리꿈스퀘어에 다양한 VR 초기 기업들을 입주시켜 개발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에서 사업화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디지털 파빌리온에는 VR 콘텐츠 기획 ·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개발된 제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상암동에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개최해 VR · 5G 등 ICT와 문화 콘텐츠 간 융합의 장이자 최신 VR 서비스와 제품이 선보이는 세계적인 VR 행사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도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VR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과를 높인 바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MBC 등 미디어업체가 집적된 상암동에서 'K-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등과 연계해 많은 국내외 방문객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누리꿈스퀘어에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제작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해 스타트업 등에 기술이전 창구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VR 제작 ·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산학협력 기반 창의적 VR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VR 캠퍼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주, 상암 지역에 자연과 문화의 풍경과 고궁 등을 VR로 경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조성하고, 동대문, 광화문, 수원 등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VR 체험관을 구축하고 대구, 서울 등에 VR 어트랙션을 운영한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중국, 태국 등 KCON(한류 문화행사) 등과 연계해 국내 VR 콘텐츠 수출 지원 등의 비즈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에 스포츠 종목 등의 VR · AR 체험존을 구축해 국민들이 주변에서 VR 콘텐츠를 손쉽게 즐기고,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VR 체험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영상을 세계최초로 고화질(8K UHD) VR 카메라로 촬영, 5G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VR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1.7년에서 0.5년으로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VR 전문기업도 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가 가진 한류 콘텐츠와 우수한 ICT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VR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면 VR은 말 그대로 더 큰 성장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로봇VR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장년,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는다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haaj0503@korea.kr

우리나라 장년의 은퇴연령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보다 오래 일하고자 하는 장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높은 일자리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장년 고용여건은 좋지 못하다.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후 임시 · 일용, 단순 노무직 등의 재취업 일자리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히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이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학력 · 고숙련직 종사자가 많은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산업 구조조정의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도 장년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기업 내 평생 교육 · 훈련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0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2018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 · 보완해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조정 등의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의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 종합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의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이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기회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환경 ·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수준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훈련참여율 제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 · 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HRD컨설팅을 제공(2017년 30개소)하고 우수모델을 확산한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 자체훈련뿐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장년이 빠른 산업 ·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도 마련할 계

내일배움카드제는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획이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 · 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적합 훈련직종 중심으로 '장년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연 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69세로 확대

셋째,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은퇴까지 20여년을 더 일하는 구조에서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 · 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천→6천명)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하도록 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에는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범실시(5천명)한 후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넷째, 장년적합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사업주로서 장년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기업의 제시임금과 장년의 희망임금 간 격차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장려금제도도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및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 ·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 내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문제 해결이 곧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6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시간선택제 · 경력직 ·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 경기 · 부산 일부, 세종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sungtae@korea.kr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다. 이에 정부는 서민 ·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총 5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 뉴스테이, 주거급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5년 주택거래량은 119만4천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은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대상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택지 유형
서울특별시	25개구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민간택지 + 공공택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공공택지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매력,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지속, 분양권 전매차익 기대 등에 따라 서울 재건축 시장 및 지방 일부지역 등은 청약경쟁률이 100:1을 상회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 강화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의 유입은 실수요자의 청약당첨을 힘들게 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무주택 가구 등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신규주택에 대한 청약수요가 많다. 이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당첨 기회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청약시장에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투자수요의 유입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기에 청약시장의 국지적 과열로 인한 서울 재건축 예정단지의 가격상승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 저물가 등 경제상황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2017년 이후 입주물량 증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주택경기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과 달리 오버슈팅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과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 · 단계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자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적인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일부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처방을 내리고자 했다.

또한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강화 등의 내용도 같이 포함했다.

선정 지역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해 과도한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

우선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한다.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주택시장 지표를 토대로 서울, 경기 · 부산지역 일부, 세종 등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표〉 참조)에 대해선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강화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해 과도한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 등에서 청약당첨이 된 적이 있었던 세대의 구성원은 앞으로 최대 5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민간택지 중 청약수요가 많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서울의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경기 과천시와 공공택지 중 하남 · 동탄 · 남양주 · 고양 · 세종 등의 신도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로 연장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코자 한다.

디딤돌 대출 등 차질 없이 공급, 정비사업은 투명하게

선별된 지역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도 마련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분양받으려는 과도한 단기 투자목적의 청약신청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첫째,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해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선정지역은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해 2순위 청약신청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선정지역은 청약일정을 분리해 1일 차에는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만, 2일 차에는 1순위 중 기타지역 거주자가 청약신청하도록 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청약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예정된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시행을 유보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최근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로 중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시기는 5개월 유예하며, 중도금 비율도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 수분양자를 지원한다.

끝으로,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재건축 · 재개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시스템 미흡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 ·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원칙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 재개발 조합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 · 외부 감시도 강화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청약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상시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다.

정부는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대책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강화된 전매제한제도는 11월 3일부터, 재당첨 · 1순위 제한 등은 11월 15일부터 시행해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 中企인재 10만 키운다

중소 · 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 chyung21@korea.kr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최근 '중소 · 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 ·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 정책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한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중소 · 중견기업의 세계화가 필수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바로 우수인력 확보다. 그러나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가 대 ·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으로 중소 · 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력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직원들의 근로보상 체계를 혁신해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미래성과공유제'다.



지난 11월 3일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왼쪽부터) 박진우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단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고 내일채움공제 확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방식에 따라 현금(경영성과급), 주식(우리사주 · 스톡옵션), 공제 및 기금(내일채움공제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6%가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경영성과급(24.7%)과 내일채움공제(19%)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성과공유제'는 현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 기업가치가 커지면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키로 약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경영성과급은 현재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의 일종으로 이

중기청은 우선 전국 5곳의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해 재직자 교육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온 · 오프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ICT 융합기술, 하이테크, 스마트팩토리 운용 등으로 개편해 매년 2~3만명의 재직자에게 4차 산업혁명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을 매년 7~8천명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익이 적은 기업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미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서로 계약하면 근로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력유입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가칭)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일정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과공유의 기준, 방법,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표준모델과 기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4년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2:1의 비율로 공제금을 납입, 5년 이상 장기재직 시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0월 현재 약 7천개 기업, 1만7천명이 가입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원, 부산, 대구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7월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들은 월평균 32만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되고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도 6.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이번 혁신안의 또 다른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0만 혁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무한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중기청은 우선 전국 5곳의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해 재직자 교육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온 · 오프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ICT 융합기술, 하이테크, 스마트팩토리 운용 등으로 개편해 매년 2~3만명의 재직자에게 4차 산업혁명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을 매년 7~8천명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 기술교육 위주였던 연수원 이러닝과정을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개편해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CT 융합기술 온라인 교육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분석해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선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NCS 847개 직무분류 중 교육수요가 많은 100개 교육과정을 개설,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수출확대 및 창업활성화도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 · 기능 · 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석 · 박사 인력의 기업 연구지원과 체험활동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 · 학 · 연 R&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석사)와 의료 · 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도 늘릴 예정이다. 수출 전문 · 보조인력도 수준별로 양성 · 공급하기 위해 우선 GMD(Global Market Developer)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해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중국 ·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도 신설해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위주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3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구축하고 지역별 '인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개선의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E U I S S U E

가계부채비율 높으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까?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이유

일반적으로 국가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는 가계처분가능소득, 명목GDP, 가계금융자산 등의 채무상환능력(분모) 대비 가계부채(분자)의 비율 통계를 활용한다. 각 지표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은 미국, 영국 등 영미계 국가나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들을 상당 폭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는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유로화 미사용국으로 자국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주택가격이 장기간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사진) 노르웨이 오슬로의 주택가

주요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채로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준)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가 28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 227%, 179%로 우리나라(170%, 2015년 가계신용통계 기준으로는 144%)는 물론 주요국(미국 113%, 독일 94%, 일본 132%)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과거 추이를 보더라도 이들 국가의 가계부채비율은 추세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상승 속도도 매우 빨라 지난 20년간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덴마크의 가계부채비율이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하락 전환된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명목 GDP 또는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타국과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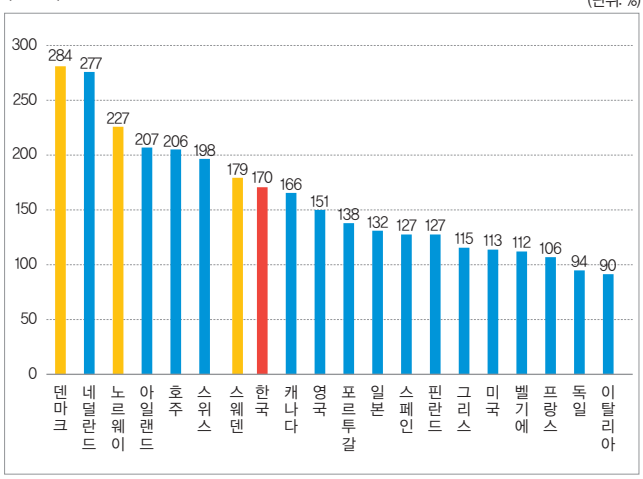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가 잘 발달한 덴마크 가계부채비율 월등히 높아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배경은 주요국에서도 관찰되는 공통요인과 이들 국가만의 특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 하락, 금융혁신 진전 등이며, 특이요인으로는 연금제도의 발달, 모기지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먼저 주택구입이 가계부채 창출의 주요 동인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발생 직전까지 일본,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의 추가대출을 유도하고 담보가치 상승에 따른 대출제약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 또한 가계의 대출제약 완화 등에 기인한 주택수요 증가는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주택가격이 장기간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위기 이후 거시안정화정책과 더불어 노동 · 공기업 · 금융 · 사회복지 등 경제 각 부문에서 미시적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한 데 힘입어 경제체질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견조한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해 주택구입 등 모기지 관련 대출수요가 늘어난 것도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덴마크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된 것과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주택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 스웨덴의 가계부채비율 움직임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지난 수십년간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의 영향으로 주요국에서는 저소득 계층 및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대출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1980년대에 금융자유

〈그림 1〉 주요국 가계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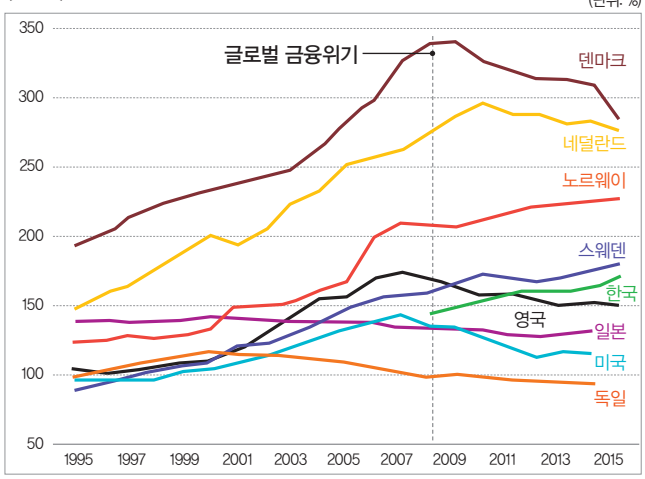
(단위: %)



주: 덴마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한국 · 영국 · 포르투갈 2015년, 스위스 2013년, 나머지 2014년 기준
자료: OECD

〈그림 2〉 주요국 가계부채비율 추이

(단위: %)



주: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부채비율
자료: OECD

김제현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주재관
jehkim@bok.or.kr



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됐으며 1990년대 들어선 금융혁신을 배경으로 모기지대출과 관련한 다양한 신상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모기지 조기상환조건 완화 및 만기 장기화, 변동금리 및 거치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취급 확대, 높은 LTV 비율 적용을 통한 자산증식 저당 대출(mortgage equity withdrawal; 주택가격 상승 시 상승분만큼 추가대출을 받는 제도)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래소득 보장 믿음이 가계의 부채보유 성향 높여

셋째, 주택가격 상승, 금리 하락, 금융혁신 진전 등이 여타국에서도 관찰되는 공통요인이라면 연금제도 발달은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특이요인에 해당된다. 연금제도 발달은 가계로 하여금 은퇴 후에도 적정 규모의 미래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 부채 창출 및 상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계의 부채 성향은 자국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들 북유럽 국가는 고율의 세금부과와 강제저축에 의해 공적연금 재원이 조달되고 사적연금 기금 규모도 매우 안정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여타국과 차별화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가계자산 중 연금자산 규모가 가계부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보험 등 여타 금융자산을 모두 합한 전체 가계자산 기준으로는 가계부채를 1.5~2배 정도 웃돌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가계부채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가계의 은퇴 전 부채상환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기인한다. 한편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에 비해 선 연금자산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1인당 GDP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5만달러 수준인 두 국가보다 훨씬 큰 7만5천달러에 이르고, 경제적 번영정도를 평가하는 레가텀지수(이하 Legatum지수; 영국 Legatum 연구소가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 기업가정신, 교육, 보건, 안전 · 안보, 국가경영, 개인의 자유, 사회적자본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며, 201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1위, 덴마크 3위, 스웨덴 5위이며 우리나라는 28위)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중앙은행이 21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가계자산, 연금자산, Legatum지수 등의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연금자산과 Legatum지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금자산 비중 및 경제적 번영정도가 우월한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이 왜 주요국보다 추세적으로 높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주체들이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우호적인 경제환경은 가계의 부채보유 성향을 높이고 은퇴 전 부채상환 유인을 작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더딘 발달로 국민들의 자가보유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모기지대출 등 주택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해 주택보유이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모기지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해 큰 폭의 세금감면을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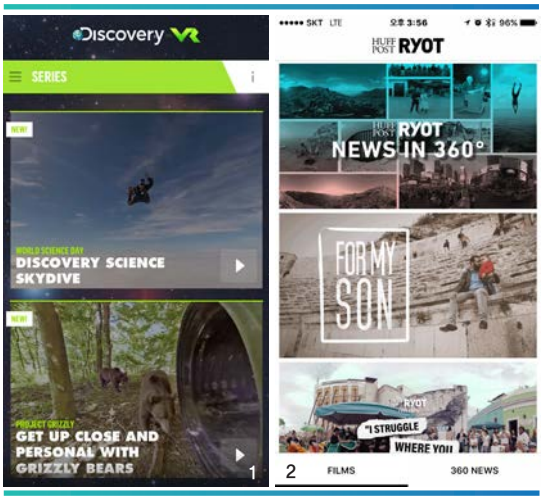
북유럽 국가들 가계부채 리스크의 현재화 대비해
거시건전성 수단, 부동산 세제 꾸준히 정비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연금제도 발달, 양호하고 안정적인 경제시스템 등이 가계의 부채수요 및 채무상환능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을 겪었던 국가들은 미국, 스페인 등 가계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부채비율의 수준 및 상승속도 등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실업, 소득 감소, 주택가격 급락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지고 경제의 회복력 약화로 불황의 기간 및 크기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적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조기에 복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금융 · 경제 시스템이 사전에 잘 구축돼 있다면 리스크 크기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가계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수단, 부동산 세제, 모기지대출 규제 등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이들 국가에 근접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견줄 만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가 확실한 미래소득이 보장된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주택가격 급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불확실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면 충격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거시경제 · 거시건전성 · 부동산 등 가계부채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책 이외에도 사회 각 부문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로 다가온 가상의 세계를 만나다

이제 가상현실(VR)은 더 이상 SF영화의 소재가 아니다.
VR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저널리즘, 영화 제작은 물론 스토리텔링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부쩍 가까이 다가온 VR의 실재를 살펴본다.



1. '디스커버리 VR' 메인 화면 2. '리요트 VR' 메인 화면

디스커버리 VR: Discovery VR
전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

인기 TV 회사 디스커버리에서 내놓은 가상현실 앱으로 디스커버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다양한 장소를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다. 30여년 동안 쌓여 방대해진 양의 DB(데이터베이스) 덕분에 평범한 관광지가 아닌 오지와 이국적인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물론 360° 동영상을 통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동안 디스커버리가 일방적으로 제공만 했던 모험과 발견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360° 동영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전용 VR 헤드셋을 추가한다면 보다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리요트 VR: RYOT VR
뉴스 속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

뉴스 매체 허핑턴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앱이다. 위험한 전쟁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취재를 나간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360° 동영상 및 VR 콘텐츠를 통해 뉴스 속 현장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VR 자체의 가치는 높지 않지만,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의 특성이 집중 탐색과 가치 발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탄탄한 정보 수집 기술만으로도 앱 이용자들의 참여와 행동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꾸밈없고 사실적인 느낌으로 이용자들이 단순히 뉴스를 접하는 것만이 아닌 현장에 직접 놓인 듯한 긴장감을 준다.

구글 아트 앤 컬처: Google Arts & Culture
수천점의 작품을 한눈에, 다각도로 관람

구글 아트 앤 컬처는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전시 플랫폼으로, 전 세계 문화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1,200개 이상의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 범위와 깊이는 넓어질 예정이다. 구글 카드보드와 연결하면 수천점의 미술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작품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직접 작품과 관련한 설명을 해주는 개인 도슨트(박물관 안내원) 역할도 수행한다.

■ **이우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마이크로데이터 120% 활용하기

김문숙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서기관
kms8301@korea.kr



최근 우리 사회는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1인 단독가구의 증가 및 저출산 · 고령화와 같은 인구 · 가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서비스 부문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붕괴시키고,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즉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 증가, 장기실업 등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 사회 · 경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호에선 통계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해 소개한다.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시스템 통해 77종의 통계 서비스

공공용 자료는 무료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조사오류, 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인, 가구, 사업체 등 특성에 관한 자료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이미 공표된 통계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새로운 분석자료(종단, 횡단 시계열자료 등)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지니계수를 작성하고, 시계열자료를 분석해 소득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통계분석의 기초가 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1993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담당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해 제공하던 시기로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클리닝 상태를 신뢰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그동안 생산된 통계자료를 전산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축적해 클리닝 작업을 거친 품질 좋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자료를 개방 · 공유하기로 한 지 3년여가 지난 현재,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http://mdis.kostat.go.kr)을 통해 통계청 통계 40종과 보건복지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37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마이크로데이터 사용량의 95%에 해당하는 공공용 자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고, 여타 서비스수수료는 대폭 경감하는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서비스 개선(2015년 12월 14일)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는 2014년 1월~2015년 11월까지 816건에 비해 2015년 12월~2016년 8월까지 2,670건으로 약 3.3배가량 증가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조사의 관찰단위에 대한 개체자료다. 그 단위는 사람이나 가구, 기업 또는 개별 사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존 싱클레어는 이러한 단위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의 양을 조사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MICRO DATA

을 탐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마련과 고령화 진척에 따른 재정부담 추이 산출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한 지원제도나 '일 중심'에서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정률제와 가족친화인증기업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 실시한 '제1회 마이크로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한국사회의 주관적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 의식 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개량된 APC-D모형에 의거해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 인식의 변화 추세를 분석했다.

우수상을 받은 「공적부조금이 지역 내, 지역 간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농가소득 중 공적부조금이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고, 공적부조금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빅데이터와의 융 · 복합 통해 새로운 정보로 변신하는 마이크로데이터

마지막으로,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 사용양태」는 자기보호아동이 방과 후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방과 후 생활시간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와 저소득가구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적인 분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자료를 MDI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미시적인 분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버를 통한 원격접근(RAS; Remote Access Service) 서비스와 통계전문가가 상주하는 이용센터(Research Data Center)를 이용하면 된다. 원격접근과 이용센터, 주문형 서비스(통계분석 대행)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빅데이터와의 융 · 복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로 변신해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게 변화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표〉 마이크로데이터 유형과 특징

유형		이용방법	특징	수수료
공공용		홈페이지 (MDIS)	• 직접 필요항목 추출 후 다운로드 • 응답자 식별 방지를 위해 매스킹 처리	무료
인가용	승인용	원격접근 (RAS), 이용센터 (RDC)	• 공공용 미제공 항목 추가 제공 • 매스킹 되지 않은 자료 분석 • 비밀, 민감정보 등은 제공 불가 (일부 비밀정보는 필요시 임의키 제공)	유료
	특수목적용	이용센터 (RDC)	• 매스킹 되지 않은 자료 분석 • 비밀, 민감정보 등 승인용 미제공 항목검토 후 제공	유료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doublewood@korea.kr



새옹밥, 감투밥, 소밥… '밥'을 가리키는 말들

'밥 한 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고 합니다. 귀신이 붙은 듯 몸이 쇠약해졌을 때 밥을 충분히 먹고 몸을 돌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밥만 꼭꼭 챙겨 드셔도 추운 겨울을 거뜬하게 이겨낼 테니, 독자 여러분 모두 끼니 거르지 마세요. 이번 호에서는 여러 가지 밥을 가리키는 말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지만, 밥은 아무래도 가마솥에 지은 '가맛밥'이 맛있습니다. '가맛밥' 말고도 뚝배기나 옹자배기에 짓는 '옹기밥'과 작은 솥처럼 생긴 새옹에 지어서 그릇째로 상에 올리는 '새옹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안친 그릇을 그대로 가마에 넣어 짓는 '떨렁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끓일 때 떨렁떨렁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손수 밥을 지을 때에는 밥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물을 적당히 맞추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맛있는 밥이 되지만, 잘못하면 '된밥'이 되기도 하고 '진밥'이 되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된밥이나 진밥은 먹을 만하지만 밥물을 너무 적게 잡아서 꼬들꼬들해진 '고두밥'이나, 너무 많게 잡아서 질척질척해진 '죽밥'은 먹기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된밥이나 진밥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한 번에 지어 내고자 한다면 솥 안에 쌀을 언덕지게 안쳐서 한쪽은 질게, 다른 쪽은 되게 하는 '언덕밥'으로 지으면 됩니다. 언덕밥이 요령이 좋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밥이라면, 삼층밥은 서툰 사람이 짓는 밥입니다. 맨 위는 설익은 '선밥'이 되고, 중간은 제대로 되고, 맨 밑은 탄 밥이 돼 층이 진 '삼층밥'에는 먹잘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밥도 갓 지어 따뜻한 '더운밥'이거나 솥에서 바로 푼 '숫밥'일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지난 끼니때 지은 '찬밥'이나 어제 지은 '묵은밥'은 아무래도 맛이 떨어져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밥을 지어 놓고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쉰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적당한 양으로 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어 버린 찬밥은 거기에 물을 조금 치고 다시 무르게 끓여서 '중둥밥'으로 먹기도 합니다. 한 번에 짓는 밥의 양을 가리키는 말로는 '됫밥, 말밥, 섬밥'이 있습니다. 각각 '한 되쯤, 한 말쯤, 한 섬쯤 되는 곡식으로 지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은 아무래도 반찬과 국을 함께 먹어야 제격입니다. 맛난 고기와 나물 반찬에 뜨끈뜨끈한 국물이 어우러지면 입맛이 당기는 '단밥'이 됩니다. 모처럼 맛있는 반찬이 차려진 날에는 밥도 그릇 위까지 수북하게 '고봉밥'으로 담아 먹습니다. 고봉밥은 감투처럼 생겼다 해서 '감투밥'이라고도 하고, 힘든 노동에 늘 허기진 머슴들이 먹는 밥 같다 해 '머슴밥'이라고도 합니다. 한창 클 때는 고봉밥을 싹 비우고도 '덧밥'을 먹기도 하죠. 게다가 누룽지를 물에 불린 구수한 '눌은밥'까지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이처럼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밥을 '한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얼마 먹지 않다가 갑자기 몰아치듯 많이 먹는 밥은 '소나기밥'이라고 한답니다. 반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국 없이 반찬만으로 '마른밥'을 먹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반찬마저 없이 '강밥'을 먹는 일도 있겠죠. 이럴 때는 보잘 것 없는 반찬으로 차린 '소금밥'이나 푸성귀로만 찬을 차린 '소밥'도 감지덕지일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수성찬도 '눈칫밥'으로 먹느니 안 먹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소박하나마 사랑하는 가족과 '한솥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맘 편히 먹는 밥이 가장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서 '밥 한 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는 속담을 소개했는데요. '고기 한 점이 귀신 천 머리를 쫓는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둘 다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데에는 밥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이긴 한데, 고기 한 점으로 귀신 천을 쫓는다니 옛사람들도 고기를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농촌 출신인 필자가 주말농장을 일구면서 겪는 소박하고 진솔한 농사 이야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큰 수확물은 '힐링'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jeje@hani.co.kr



11월 중순에 접어들자 한 해 농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밭에 남은 작물은 김장용 배추와 약간의 가을상추뿐이다. 냉해를 입기 전에 배추를 수확하고 나면 상추도 추위에 시들 것이다. 원두막에선 무청 시래기가 마르고 있다. 밭 한편 수확한 무를 묻어둔 자리가 불룩하다. 밭 옆 산자락의 상수리나무에서 이파리들이 떨어져 나와 작은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게 장관이다. 풀들은 더 자라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가고 땅을 파면 나오는 지렁이들은 몸놀림이 무겁다.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온몸에 흐른다.

밭둑 한편에서 밭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는 돼지감자를 캐내고 밭을 넓히기로 했다. 돼지감자는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다. 지난해 적잖이 캐냈는데도 캐낸 자리에 올해 또 빽빽하게 자랐다. 이번엔 일삼아 모조리 캐내기로 했다. 큰 사과상자로 한 상자 가득 캤다. 그래도 내년에 곳곳에서 또 자라날 것이다. 당뇨에 좋다고 해 돼지감자를 재배해서 팔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퇴비를 만드는 데 보태기로 했다. 돼지감자는 우리 밭 주변 곳곳에 군락지가 많다. 넓어진 밭엔 내년에 옥수수와 토란을 심으려 한다.



올 마지막 농사로 마늘을 심고 있는 회원들. 새로 이랑을 지어 가로 25㎝, 세로 8~10㎝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씨마늘을 심었다.

올해 마지막 농사로 마늘을 심었다. 한지형 마늘을 두 접(한 접은 통마늘 100개) 사서 11월 둘째 주말에 파종했다. 우선 목초액을 희석한 물과 왕겨를 태운 재로 씨마늘을 소독했다. 밑거름으로 유박 퇴비를 뿌리고 땅을 뒤집어 새로 이랑을 지어 가로 25㎝, 세로 8~10㎝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씨마늘을 심었다. 마늘은 내년 6월에나 수확할 것이다. 그 전에 마늘쫑을 적잖이 거둘 것이다. 씨마늘 한 접에 다섯 접은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함께 농사를 짓는 이들이 모여 큰 결심을 했다. 밭 한편에 비닐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궁리하던 일이다. 대여섯 평 땅을 빌려 쓰는 주말농장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200평의 밭을 빌려 함께 농사지을 사람을 모으고 함께 관리하는 농장을 갖고 있어 감행하기로 했다. 5m×7m 크기로 지으려니 60만원가량이 든다.

비닐집은 쓸모가 많다. 안에서 모종을 기를 수도 있고 고추를 말릴 수도 있을 것이다. 비닐집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모아 쓸 궁리도 한다. 여름에는 소나기를 피하게 해줄 것이고, 겨울 밭에서 일할 때는 잠시 몸을 녹여줄 것이다. 올겨울엔 할 일이 많다. 비닐집에선 시험 삼아 상추를 재배해 보려 한다. 배수로도 정비하고, 밭도 일삼아 삽으로 뒤집을 예정이다. 비닐집 앞에 아궁이를 하나 만들면 필요할 때 음식도 조리하고 추울 땐 불도 쬘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주말이면 거의 모든 회원이 밭에 모인다. 토요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온다. 점심을 싸갖고 와서 나눠 먹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는데, 무슨 일이라도 더 해보려고 좀체 돌아갈 줄을 모른다.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됐지만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최고의 수확물은 '힐링'이었다는 것이다. 풍성한 수확도 즐거운 일이지만 육체노동의 즐거움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한다. 내년엔 이 넓은 밭에 더 많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개인 밭의 구획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중진국 함정 탈출할 수 있어

NEWS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p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6년 10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학자들마다 정의는 다르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집합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또는 집단 내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네트워크),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행동 규칙이나 기준 및 공유된 가치(규범)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갖는다. 경제학자인 퍼트남(Putnam)에 의하면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공활동에서 행태, 태도, 성향의 기초가 된다.

사회적 신뢰도와 성장, 소득분배 간 관계

사회 신뢰도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지니계수 등 경제변수와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스웨덴의 비영리단체인 월드 밸류 서베이(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사회 신뢰도와 1인당 GDP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 신뢰도가 높으면 1인당 GDP도 늘어나 사회 신뢰도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또 사회 신뢰도와 지니계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 신뢰도가 높으면 소득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물적인 요소(하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적 · 제도적 요소(소프트)의 도약이 필요하다.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물적인 요소라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법과 제도, 준법정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와 정직 등이 정신적 · 제도적 요소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선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에서 드러나듯 '소프트 부문의 혁신' 없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적 신뢰' OECD 평균 이하

대한민국은 과거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었다. 국난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쳤던 국민성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이런 우리 민족의 장점이 최근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고조는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는 국민적 통합을 저해한다.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본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따라서 국민 삶의 질이 꾸준히 높아진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파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와 신뢰, 호혜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돼 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내재돼 있다. 이 위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하지

만 신뢰가 높을 경우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돼 경제가 발전한다. 신뢰는 또 믿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낳고, 믿을 수 있는 규범은 호혜적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면 대규모 조직이 잘 운영되고, 정부는 더 효율적이 된다. 금융산업 또한 더 발전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대한민국을 '신뢰가 부족한 저신뢰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그렇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5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일본(38.8%), 미국(35.1%)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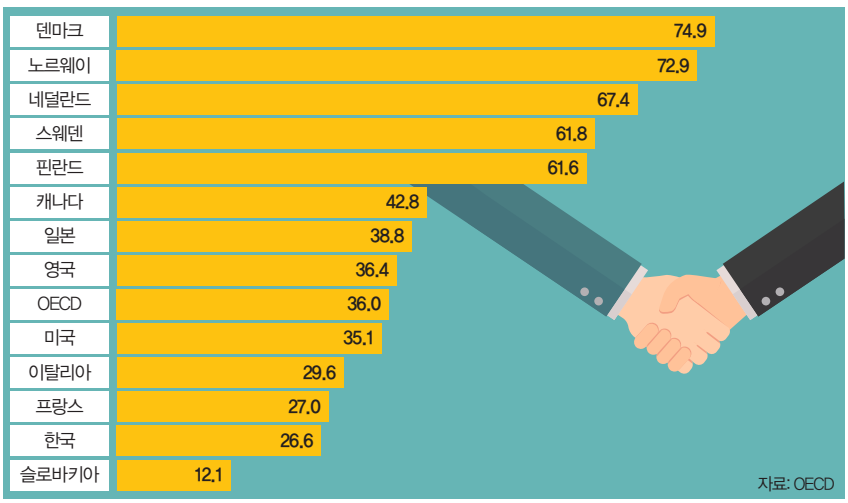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의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 네트워크 수준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7.5%로 35개국 중 34위였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사회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은 모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유선전화 설문방식으로 1,009명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 사람은 29.7%로 네덜란드(66.2%)나 미국(38.2%)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정치권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 관료의 질, 법질서 등이 사회적 신뢰 좌우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하고 타인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경제학자인 애로우(Arrow)는 "모든 상거래는 신뢰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경제적 후진성의 대부분은 결국 상호 신뢰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못사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림〉 OECD 회원국 사회적 신뢰도 (단위: %)



국제적인 연구(1997 Knack and Keefer, 2001 Dincer and Uslaner의 논문)에 따르면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p 저하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8%p가량 낮아지는 반면 신뢰가 10%p 높아질 때 1인당 국민소득은 0.5%p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회균등의 보장'(응답자의 31.4%)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민의식 제고(23.6%), 법치주의 정립(19.9%), 경제적 약자 배려(15.4%),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9.7%) 순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부패, 관료의 질, 법질서,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자유 등이 사회적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사회 지도층의 부패척결, 정치개혁,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경제적 자유의 허용, 법질서의 강화 및 법치의 회복, 노조나 이익단체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뢰는 또 구성원들 간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국가 자체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법적 이행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때에 높아진다. 사회제도적 공정성과 정부의 정책 또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고취→투자 증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은 한국의 사회 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4%대로 1.5%p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글로벌화와 박물관 예찬



이인옥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bangpa@korea.kr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지난 20여년간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왔으며, 그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글로벌화의 의의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선 이미 학문적 · 경제학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으며 각국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굳이 분류하자면 지역주의(localization)에 가까워 얼핏 글로벌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박물관은 글로벌화에 성공적으로 편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의 문화유산

몇 년 전 직무훈련차 영국에 머물렀을 때 주말이면 무료로 개방되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곤 했다. 그중에서도 대영박물관에는 인생 100년을 비웃는 듯 수천년에 걸친 역사적 문물이 넘쳐났다. 문화유산, 유물 등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나에게도 늘 흥미롭고 재미있는 곳이었다. 대영박물관에서 가장 관람객이 붐비는 곳은 이집트관인데 그 옛날 이렇게 다양하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했나 싶을 정도로 미이라를 담은 관이나 벽화의 그림이 현란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명멸했던 여러 문명이 남긴 조각품이나 그림은 당장 말이라도 걸어올 듯 생동감이 넘쳤다. 아시아관에 이르러서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압도하는 중국관, 정교함과 독특함으로 존재감이 부각되는 일본관이 있었다. 이곳을 지나면 한국관이 나오는데 좋게 말하면 은은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에 조예가 깊지 못한 관광객 흐름에 끼여 관망하자면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 훈민정음과 한글에 관련된 것이 전시돼 있는데 자렛 다이아몬드가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에서 한글에 대해 '대단히 훌륭하고 독특한 문자(remarkable wonderful indigenous alphabet)'라고 언급한 사실이 떠올라 조금 위안이 됐다.

귀국 후 중앙박물관 등을 몇 번 방문했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 등 옛 유물의 아름다움이 색다르게 다가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 6세기 말~7세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향로는 지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위치한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들

금 그 문양을 모방한 디자인을 만든다 해도 현대적 미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됐다.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정교함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고, 신윤복이 새초롬한 미인의 모습을 그린 붓끝은 섬세하기 그지없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세계인이 규격이 같은 냉장고, TV, 휴대폰을 사용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상황에서 새삼스레 고리타분하게 수백년 전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를 선도한 미국이 불과 200여년밖에 안 되는 역사적 유산 및 유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수백년 된 건물이나 유적을 끌어안고 보듬는 유럽인들, 유구한 역사 및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큰 중국이 아낌없이 보존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갖는 시간을 관통하는 정체성(identity)과 자부심, 스토리, 아름다움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1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조타수, 박물관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제 · 산업계에서는 시장개방, 기술발달 촉진,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글로벌화라는 공통분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가진 독특한 문화유산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입혀 분자를 키움으로써 몫을 커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유물을 찾아 모험을 하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블시리즈의 하나인 〈닥터 스트레인지〉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했음에도 사건의 열쇠는 수천년간의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과 고서점에 있으며 스토리나 의상 등도 그곳에서 빌려 오고 있다. 미국 영화는 이집트나 네팔 등으로 찾아가야 하지만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가진 우리는 굳이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의 '한류'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박물관은 그 중심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배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물관은 유물과 유산을 박제해 놓는 곳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와 현대와 역동적으로 교감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릴 때부터 박물관, 미술관이 친숙하고 즐거운 곳이 돼야 하고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심미안 등 감성을 자극해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박물관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유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개개의 유물이나 유산이 갖는 스토리나 작품의 배경, 작가의 생각 등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관람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친숙해지는 데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박물관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SNS 등을 위한 디지털기기 활용을 다변화해 나가고 정규 교과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유산 등에 대한 교육도 암기식이 아니라 박물관 등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해도, 자기 것을 잘 모르고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역사와 문화, 유물, 유산을 보고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교감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출발점이며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드러그스토어, 전자상거래, 편의점… 日 유통망 시장 선도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대형종합슈퍼, 편의점, 백화점, 전자상거래(EC), 가전양판점, 홈센터, 드러그스토어(drugstore) 등 7대 유통업계의 산업구조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전자상거래, 드러그스토어, 편의점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대형종합슈퍼, 홈센터, 백화점은 줄어드는 매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과거 일본 소비자들은 전통과 의미를 중시하고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져 있는 물건 구매를 즐겼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소비성향은 실용적인 소비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관광의 중심지라고 보기 힘든 나고야 시내에 양손 가득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수많은 유커(중국 관광객)들이 보인다. 해외여행의 목적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쇼핑(53.6%)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커들은 해외에서 열성적인 쇼핑(일명 '바쿠가이', 爆買い)으로 유명하다. 중국인들의 대량구매는 침체된 일본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관광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에는 대형 드러그스토어(drugstore)들이 입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형 드러그스토어는 해외관광객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내세워 일본 유통업계 구조에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유통업계의 새로운 강자 전자상거래… 일본 가정의 27.6%가 이용

일본 소매유통업 규모는 29조268억엔(2014년)으로 일본 전체 GDP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유통업 종사자는 총 728만명으로 제조업(1,035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여파로 국내 수요의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대형종합슈퍼, 편의점, 백화점, 전자상거래, 가전양판점, 홈센터, 드러그스토어 등 7대 유통업계의 산업구조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전자상거래, 드러그스토어, 편의점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대형종합슈퍼, 홈센터, 백화점은 줄어드는 매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전자상거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B2C(business to consumer) 시장규모는 13조8천억엔으로 전년 대비 7.6% 성장했다. 2010년의 7조7천억엔과 비교하면 무려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2020년에는 22조9천억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전자상거래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온라인상거래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은 라쿠텐, 아마존저팬, 야후와 같은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다. 아마존저팬은 2015년에 1조엔의 매출액을 올리며 일본 전자상거래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편의점 4,166개, 대형종합슈퍼 184개, 백화점 3.8개점의 매출과 비슷한 어마어마한 규모다. 향후 영유아가 있는 가정, 고령자 부부 등 매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 계층이 두터워지면 시장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될 시기에는 젊은 남성 소비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나이 · 성별을 불문한 전체 일본 가정의 27.6%(2015년 기준)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저팬, 라쿠텐처럼 자사 사이트를 활용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가전 · 의류 · 화장품 업체들은 자사 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해 직접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소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여행 관련 비용(21.8%)이라는 것

유예진
KOTRA 나고야무역관 과장
yejina@kotra.or.kr



이다. 이는 비교적 고가로 분류되는 항공권의 40%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항목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신중하게 비교하고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구매행위의 편리함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소비시장의 선두주자 편의점

드러그스토어는 총 6조엔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 화장품, 일용품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의 특산품과 식품류로 판매품종의 다변화를 꾀했다. 그 결과 이제는 슈퍼마켓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으며 많은 유통업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드러그스토어 매출의 20%는 외국관광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돋보인다. 적극적인 면세 코너를 설치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중국어 ·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러그스토어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향후 드러그스토어 대형 업체 간의 합병, 전국 광역 체인화, 대형 종합슈퍼 또는 편의점과의 수평적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편의점은 지리적 접근성과 소규모 구입을 원하는 1인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 성장에 큰 힘을 받았다. 또한 1인 가구에 맞춘 저염식 식단과 배달 도시락 상품을 속속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내수시장 속에서 점포 수 과잉, 경쟁화로 인해 유통업계 시장에서 편의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등 편의점 브랜드는 이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호황을 지속시킨다는 전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통산업은 중복되는 판매영역이 많고 직 ·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두가 경쟁자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대형유통망이었던 백화점, 슈퍼마켓, 홈센터 등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 경제산업성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제품 소비가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 업계의 2014년 매출증가율은 22.8%로 2008년 리먼 쇼크 이래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홈센터와 대형슈퍼도 각각 −1.0%, 5.9%로 매출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온, 유니, 이토요카도 등 대형슈퍼마켓들이 주별 판매대 재배치, 지역 슈퍼마켓들과의 제휴, 수익성 높은 점포 입점 유치 등 기업의 존속을 위한 회생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에 반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드러그스토어, 편의점 등이 유통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산업의 내외부 환경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일본 소비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과거 일본 소비자들은 전통과 의미를 중시하고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져 있는 물건 구매를 즐겼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소비성향은 실용적인 소비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아니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절약지향형 소비자들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를 정확히 분석한 후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유통채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최근 급부상한 전자상거래가 높은 시장 파급력과 접근 용이성을 내세워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유통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한 드러그스토어에서 쇼핑객들이 진열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동태경제학으로 본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처럼 1.2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균형 생산인구비율은 37%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위축되면 부양부담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출산율을 높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결국 낮은 생산인구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규모는 계속 감소하는 축소지향적 균형으로 접어들게 된다.

저출산 · 고령화, 그리고 미래의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주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인구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가 늙고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그동안 인구가 많아서 생겨났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집도 구하기 힘든데 인구가 늘어나봐야 뭐하겠느냐는 생각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인구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란은 인구가 급증하던 19세기 맬서스(Malthus)로부터 시작됐다. 그가 이야기했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식량의 점진적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배고픔의 영구적 지속'이라는 비관론은 이후 식량생산의 혁신적 증가와 인구증가율의 점진적 감소로 기우에 그치고 말았다.

현대 인구문제는 본질적으로 세대 간 자원배분의 문제

크게 보면 인구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생산성만 뒷받침된다면 먹고사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인구문제는 맬서스 시대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과거에는 인구수와 식량생산량 사이의 비율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인구의 연령별 구성과 세대 간 배분이 더 중요해졌다. 현대 경제에서는 맬서스 시대에는 없었던 '은퇴'라는 현상이 새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60세를 넘기 힘들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면서 은퇴자 계층이 생겨났다. 은퇴자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자와 서비스의 일부를 소비한다. 이러한 세대 간 자원 이전(transfer)은 가족 내에서의 이전, 개인의 저축을 매개로 한 이전 또는 국가 재정을 통한 이전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인구에 비해 생산량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은퇴자들에게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부담을 지도록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인구문제에서 핵심변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와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 사이의 비율이 된다. 이 비율을 생산인구비율 또는 자립률(support ratio)이라고 한다.

생산인구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구문제가 경제에 주는 부담은 적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율과 그 결정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동태적(dynamic)이고 복잡하다는



초저출산 세대가 생산인구 풀에 진입할 때쯤이면 인구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 되면서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것이다. 생산인구비율은 크게 보면 생산인구 풀(pool)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와 생산인구 풀에서 나와 은퇴자 풀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각각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생산인구 풀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은퇴자 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면 생산인구비율은 낮아진다. 평균수명이나 은퇴연령 등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생산인구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은퇴하는 사람들의 수는 각각 이들이 태어났을 당시의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는 출산율이다. 동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출산율은 매순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변수(control variable)고, 생산인구비율은 통제변수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움직이면서 경제의 상태를 결정하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다. 따라서 인구구조 문제의 해결은 최적의 생산인구비율 유지를 목표로 매순간 출산율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 된다.

40년 후 생산인구비율 50% 수준 급락…
인구 절반이 나머지 절반 먹여 살려야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수가 줄면서 생산인구비율(15~64세 인구비율)이 크게 높아져 최근에는 세계최고 수준인 73%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내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고, 초저출산 세대가 생산인구 풀에 진입할 나이가 되면 더욱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비율이 66%, 40년 후에는 50% 수준으로 급락한다. 인구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 되면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비율이 바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목할 것은 우리 경제가 아직 70%가 넘는 높은 생산인구비율을 누리고 있어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과 경합하는 인구도 너무 많다. 게다가 당장 출산율을 높이면 각 가정의 생산인구비율이 하락하면서, 즉 부양가족이 늘면서 살림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산율을 정말 높여야 하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1.2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균형 생산인구비율은 37%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위축되면 부양부담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출산율을 높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결국 낮은 생산인구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규모는 계속 감소하는 축소지향적 균형으로 접어들게 된다.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피라미드의 크기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출산율이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현재의 높은 생산인구비율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느 나라든 65%가 넘는 생산인구비율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높은 비율에 도달하려면 출산율을 크게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 생산인구의 기반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60~65% 정도의 생산인구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출산율을 높여가야 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인구구조의 왜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문제는 흔히 장기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 밤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출산율은 영향을 받고, 그것이 바로 생산인구비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jha@hanyang.ac.kr

일본은 가까우면서 또 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와 그들은 늘 부딪히고 부대꼈다. 그 부대낌의 빈도만큼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다.
우리와 그들의 역사는 가깝고 먼 거리를 무시로 왕복하며 공통과 차이의 문화를 엮어냈다. 가깝고도 먼 곳의 집들을 둘러보며, 여기 우리의 집들과 삶을 비춰본다.

영광과 굴종의 흔적, 오키나와(沖縄) 슈리성(首里城)



슈리성 정문인 슈레이문

일본 남단의 작은 섬 오키나와의 역사는 서글프다. 작은 섬의 역사에서 자주와 영광의 순간은 멀리 있고 굴종과 상흔의 순간은 가까이 있기에 그러하다.

일본 규슈에서 대만 사이에 산개하듯 펼쳐져 있는 섬들의 무리 류큐(琉球) 제도. 크고 작게 줄지어진 200여개 섬들의 주도(主島)가 오키나와다. 오키나와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는 류큐라는 이름의 완전한 독립국이었다. 이 섬나라 왕국은, 그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을 산발적으로 이어갔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하며 또 활발한 외교와 무역을 펼쳐나간 자주적인 독립국가였다. 류큐 왕국은 독립된 국명으로 명과 조선, 그리고 안남(베트남), 샴(타이), 자바(인도네시아), 루손(필리핀), 말리타(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꾸준한 외교와 무역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1609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아래 있던 규슈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의 침략으로 독립왕국의 지위는 무너졌다.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며 류큐 왕국을 통해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했다. 류큐 왕국이란 국명은 유지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다. 그



최우용 건축가 achitectchoi@daum.net

낮에는 설계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의 흔적들을 찾아 떠나길 좋아한다. 저서로는 「유럽방랑 건축 + 畫」, 「다시 관계의 집으로」가 있다.


1


2


3

1. 칸카이몬–슈리성 내부로 들어가는 첫번째 문
2. 슈리성 정전의 정면
3. 슈리성 공원에서 내려다본 나하 시가지

나마 남아 있던 나라의 이름과 쥐꼬리만 한 주권은 1879년 류큐 처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일본 본토의 오키나와현이란 이름으로 복속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군의 직접적인 신탁통치를 받으며 병참기지화가 됐다. 그러다 1972년 다시 일본 영토로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오키나와 본섬에는 일본 내 미군 해병대의 거의 전부가 주둔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번화가인 나하(那覇)에는 류큐 왕국의 상징인 슈리성이 있다. 류큐 왕조의 전성기인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사이에 축조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슈리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대부분 파괴돼 성벽 일부와 건축물의 기초 일부만이 남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돼 슈리성을 이루는 대략의 골격과 왕이 거주했던 공간인 정전(正殿, 일본어 발음 '세이덴') 등의 복원이 완료됐고, 지금도 남은 일부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슈리성은 성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 성벽인 외곽과 그 안을 구획하는 내곽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곽 안에는 어정(御庭, 일본어 발음 '우나')이라 불리는 중심 광장이 있다. 이 중심 광장의 전면에는 성의 중심 공간인 정전이 있다. 슈리성의 전체적인 꼴과 구성은 중국식을 따르고 있는데 정전 전면의 외관은 활모양의 곡선형 박공지붕, 즉 카라하후(唐破風)라는 전형적인 일본풍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처음 슈리성이 건축됐을 당시 정전의 외관은 카라하후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복원 주체인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한 복원의 방향과 의도를 되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하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슈리성은 2000년 12월 '구스쿠(城) 유적 및 류큐국 유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복원 성벽과 건축물은 제외)됐다. 류큐에서 오키나와로의 명칭 변경에서 영광에서 굴종으로, 자주에서 식민으로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과민한 비약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눈부신 파란 하늘 아래 주홍색으로 반짝이는 슈리성은 조금 스산해 보였다. 슈리성은 아름다웠지만 또 처연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에서 혼슈와 규슈를 지나 남단의 섬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의 일본 건축기행은 끝이 났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의 집들을 둘러보며 우리와 그들의 삶을 비춰보고자 한 나의 의도 또는 욕심이 독자들께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었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한 해를 이어온 졸필을 마친다.

예산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 이념과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추구하는 삶을 상당 정도 완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우리도 삶의 새로운 가치와 이에 따른 국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를 국가개조라고도 하고, 개혁이라고도 한다. 우리 예산구조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어떤 구조의 예산투입이 우리 성장동력을 되찾는 데 최적일지를 검토해야 한다.

세계가 변했다. 전 세계는 아직도 불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적으로도 성숙된 국가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이 오히려 주목되고 있다. 세계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3년 기준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적 풍요가 지구에 도래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약화됐다. 교역이 한때 세계성장의 모멘텀을 연장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처럼 대외의존적인 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내수지향적인 산업구조로의 조정이 중시된다. 세계적으로 돈은 풀렸지만 무역은 오히려 줄어들고, 취업도 정체되고 있다. 최근엔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보인다.

진정한 아시아 시대에 대비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역내 경제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인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역내 테마파크 비즈니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는 분산될 것이다. 결국 수요가 역내화하고 있다. 이 점도 예산안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마찬가지다. 역내 공동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아시아는 분명히 역내에서의 경제 확충에 의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도 국내경기를 더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도 그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면 우리로서도 미국 등 선진국을 최종 수요지역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결국 기존 사회간접자본을 역내 차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인근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신규투입이 필요하다.

정부 지도에 의한 산업정책의 효용성도 재점검해야 한다. 한 세대 전 우리 업계의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삼성이나 현대 등이 세계의 표준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자연히 정부 부처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예산배정과 직결된다. 일반국민도 변했다.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배려, 청년실업 해소, 저출산 대책, 고령자 보살피기 등에 더 획기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결국 예산구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980년대 초 대대적인 재물조사와 함께 원점에서 예산안을 다시 점검했었던 적이 있다. 효과도 있었다. 개혁이나 구조조정은 결국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구조의 근본적인 점검이 이를 촉발시키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적기다.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만나보세요.
주요 경제정책과 최신 경제동향 등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KDI 나라경제라고 입력한 뒤
〈**KDI 나라경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은
'월요 휴관제'를 폐지하고
월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수요일·토요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야간여행!

특별한 수요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특별전시 및 상설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토요일, 밤에 즐기는 박물관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 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방향 '박물관 나들길'(지하보도) 이용
지선버스(초록버스) 0018번, 간선버스(파랑버스) 502번 국립중앙박물관 하차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04383 문의 | 02-2077-9000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